

#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1994. 9

文 興 鎬(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학  
역

##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1980년대 이후 중·대만관계는 대립 갈등시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시기를 거쳐 政治的 關係改善 및 統一問題를 論議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는 東北亞 國際情勢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특히 남북한관계 개선 및 통일실현이라는 유사한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대만의 統一政策 基調와 구체적인 政策方向, 통일정책 推進機構의 조직 체계, 인적 구성 등을 檢討하는 동시에 남북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 統一에 대한 中·臺灣의 基本認識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만이 중국대륙의 불가분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대만문제가 야기된 근본원인은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 중국혁명과정에서의 國共內戰에 있으며, 1949년 이후 대만이 중국에 귀속되지 못한 것은 서방국가들의 內政干涉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양안의 통일을 통해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民族統合, 自主性 回復, 領土 保存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제국주의 침략의 잔재로 인식하고 있는 홍콩·마카오 반환문제의 진전을 계기로 통일문제에 더욱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四個現代化 추진, 대만의 정치적 상황 변화, 주변 국제정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양안의 통일은 平和的·漸進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강조하는 平和的·漸進的 統一方案은 대만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실상부하게 견지하고 양안의 통일문제에 대한 外勢의 介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담고 있다.

한편 대만 역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統一과 富強은 해외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夣결같은 夣원인 동시에 中華民族의 團結을 통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역사적 使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통일과 관련된 많은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만이 주장하는 통일을 위한 기본전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의 對대만 무력사용 포기를 통한 양안의 확고한 平和定着, 대만의 政治實體 보장과 중국의 政治民主化 등이다.

대만의 이러한 입장은 양안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民主·自由·均富가 실현될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양안의 통일은 중국과 대만이 對等한 위치에서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공산당이 政治的 民主化, 經濟的 自由化, 社會的 多元化에 매진하지 않는 한 양안의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2. 中·臺灣의 統一政策

중국이 강조하는 一國兩制 통일방안의 핵심내용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두제도의 공존(兩制共存), 고도의 자치(高度自治) 등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세계상의 중국은 오직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며, 중국의 中央政府는 北京에 있다”는 것으로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不變의 鐵則으로 고수하고 있다. 두 제도의 공존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의미는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대륙의 社會主義制度和 대만의 資本主義制度가 장기간 共存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서로가 상대방을 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도의 자치는 양안의 정치적 통합하에서 두제도의 공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중국은 대만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문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特別行政區」 개념을 도입하였다.

한편 대만의 「國家統一綱領」(1991.3)은 1980년대 이후 양안관계 변화 및 주변 국제정세 변화 등 통일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基本立場과 段階別 政策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民主·自由·均富

에 바탕을 둔 하나의 중국건설을 통일목표로 규정하는 동시에 理性·平和·對等·互惠를 전제로 적절한 기간의 교류·합작·협상 및 민주·자유·균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一國兩區」(One Country, Two Regions)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통일정책의 推進段階를 ① 交流·互惠段階, ② 相互信賴·合作段階, ③ 統一協商段階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주요 정책방향과 조건들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중·대만의 통일정책은 基本前提, 통일정책의 推進段階, 統一中國의 未來像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一國兩制」와 「一國兩區」는 통일의 기본전제에 대한 중·대만의 근본적인 인식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의 독립적인 정치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두 제도의 공존을 강조하는 반면, 대만은 독자적인 통치지역·통치권을 가진 政治實體의 공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둘째, 중국은 통일정책 추진단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만은 현단계에서 통일을 위한 최종 협상에 이르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下位段階에서 설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전제로 上位段階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중국이 강조하는 統一中國의 未來像은 중국의 현사회주의체제와 대만의 자본주의체제가 主從의 관계로서 공존하는 一國兩制하에서 상호협력, 互補互利, 경제발전 등을 통해 국가의 主權守護, 領土保存, 民族振興을 실현하는 것이나, 대만은 상호대등한 一國兩區하에서 중국전역의 政治民主化, 經濟自由化, 社會的 多

元化를 통한 民主·自由·均富의 통일중국을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 3. 中·臺灣의 統一政策 推進機構

중국은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海峽兩岸關係協會」(海協會)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대만정책, 통일정책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며,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은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의 지침을 받아 대만정책, 통일정책과 관련된 각부처의 업무를 조율하고 각종 정책의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海協會는 대만측 海基會의 교섭상대로 설립된 사회법인형태의 조직으로서 海基會와의 접촉을 통해 교류·협력과정에서 야기된 제반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양안의 三通 및 정부차원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한편 대만의 大陸政策, 統一政策을 전담하는 주요 기구는 「國家統一委員會」, 「行政院 大陸委員會」, 「海峽交流基金會」(海基會) 등이 있다. 國家統一委員會는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總統府 직속 諮問機關이며, 중국의 中共中央 對臺工作領導小組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行政院 大陸委員會는 대만의 대륙정책, 통일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최고 實務機關이며,

海基會는 반관반민의 非營利 財團法人이지만 실제로는 行政院 大陸委員會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측 海協會의 협상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양안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4. 中·臺灣의 統一實現을 위한 課題

중국과 대만이 양안의 통일문제를 「解放」, 「收復」의 개념이 아닌 平和的·理性的 統合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각종 政策과 制度를 본격적으로 整備한 것은 불과 1990년대 이후의 일이며, 중·대만의 통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先決되어야 한다.

첫째, 정치적 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장애요인인 「兩制」, 「兩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해소되어야 한다.

둘째, 교류·협력 확대의 관건인 양안의 「三通」, 특히 直航路 개설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어야 한다.

셋째, 海協會, 海基會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仲裁機能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대만정부가 이들의 협상과정에 정치적인 의도를 지나치게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넷째, 중국의 對대만 무력사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는 양안의 平和定着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대만의 통일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對外的 統一基盤 조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5. 結論 및 示唆點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 관계발전의 부재상황속에서도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부단히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대만이 政治·非政治, 政府·民間分野를 엄격하게 분리한 대륙 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중국이 대만의 정책을 탄력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중·대만관계의 변화추이를 감안할 때, 정치·비정치분야의 불균형적인 관계발전이 지속되기 어려우며, 만약 정치적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의 교류·협력마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쌍방의 정치적 관계, 통일논의를 진일보시켜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은 중국과 대만으로 하여금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 더 나아가 통일 문제에 적극성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一國兩制 통일방안과 대만의 一國兩區 통일방안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대륙의 사회주의체제와 대만의 자본주의체제가 主從, 中央·地方의 관계로서 불평등하게 공존하느냐, 아니면 독자적인 통치권, 통치지역을 갖는 정치실체로서 대등하게 공존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만의 통일문제는 중국과 대만의 政治·經濟的 安定 유지, 양안의 政治的 關係設定 및 平和定着에 대한 입장의 절충, 對外的 統一基盤 造成 등을 통해 漸進的·段階的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중

국적 특색을 지닌 통일방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한편,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남북한 통일정책관련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현안의 완전한 해결에 집착하여 모든 교류·협력을 단절시키기 보다는 政治·非政治, 政府·民間分野의 分離를 통해 우선 비정치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쌍방의 정치적 관계발전, 통일기반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통일정책은 汎國民的 合意를 바탕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정책은 漸進的·段階的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상대방 政府 혹은 權力主體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일반주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目 次

|                          |    |
|--------------------------|----|
| 第 I 章 序 論                | 1  |
| 第 II 章 統一에 대한 中·臺灣의 基本認識 | 6  |
| 1. 中國의 基本認識              | 6  |
| 가. 臺灣問題의 解決              | 6  |
| 나. 民族統合 및 自主性 回復         | 8  |
| 다.  조건부 平和的·漸進的 統一       | 10 |
| 2. 臺灣의 基本認識              | 12 |
| 가. 民族의 團結과 富強 實現         | 12 |
| 나. 民主·自由·均富의 통일국가 건설     | 14 |
| 第 III 章 中·臺灣의 統一政策       | 16 |
| 1. 中國의 統一政策              | 16 |
| 가. 一國兩制 통일방안의 背景         | 17 |
| 나. 一國兩制 통일방안의 基本構想       | 22 |
| 2. 臺灣의 統一政策              | 30 |
| 가. 國家統一綱領의  제정  배경       | 30 |
| 나. 國家統一綱領의  주요  政策方向     | 33 |
| 3. 中·臺灣 統一政策의 比較·分析      | 39 |
| 가. 統一의 原則 및 基本前提         | 41 |
| 나. 統一 推進段階               | 45 |
| 다. 統一中國의 未來像             | 46 |

|                             |    |
|-----------------------------|----|
| 第Ⅳ章 中·臺灣의 統一政策 推進機構 .....   | 49 |
| 1. 中國의 統一政策 推進機構 .....      | 50 |
| 가.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 .....         | 50 |
| 나.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        | 53 |
| 다. 海峽兩岸關係協會 .....           | 56 |
| 2. 臺灣의 統一政策 推進機構 .....      | 59 |
| 가. 國家統一委員會 .....            | 59 |
| 나. 行政院 大陸委員會 .....          | 60 |
| 다. 海峽交流基金會 .....            | 62 |
| 第Ⅴ章 中·臺灣의 統一實現을 위한 課題 ..... | 65 |
| 1. 政治的 關係設定에 대한 合意 .....    | 65 |
| 가.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합의 .....    | 65 |
| 나. 「兩制」와 「兩區」의 절충 .....     | 67 |
| 2. 三通을 통한 交流·協力 擴大 .....    | 71 |
| 3. 海協會, 海基會의 협상기능 강화 .....  | 74 |
| 4. 平和定着 .....               | 80 |
| 5. 對外的 統一基盤 造成 .....        | 83 |
| 가. 中·美關係의 안정적 유지 .....      | 83 |
| 나. 홍콩반환문제의 합리적 해결 .....     | 89 |
| 第Ⅵ章 結論 및 示唆點 .....          | 94 |

## 〈圖表 目次〉

|                                   |    |
|-----------------------------------|----|
| 〈표 1〉 中國과 臺灣의 統一政策 비교표 .....      | 48 |
| 〈표 2〉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 주요 구성원 .....     | 52 |
| 〈표 3〉 國務院 臺灣辦公室 組織·機能·人的 構成 ..... | 56 |
| 〈표 4〉 海協會의 組織과 人的 構成 .....        | 58 |
| 〈표 5〉 行政院 大陸委員會 組織圖表.....         | 61 |
| 〈표 6〉 行政院 大陸委員會 7개처의 主要 業務 .....  | 61 |
| 〈표 7〉 海峽交流基金會 組織圖表 .....          | 64 |

## 第 I 章 序 論

중국의 鄧小平體制 출범 이후 중·대만관계는 대립·갈등시기,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시기를 거쳐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 및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중·대만관계의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과 대만의 政治·經濟的 變革이며, 사회주의권 변화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또한 이들의 관계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으로의 중·대만관계 역시 중·대만의 정치·경제적 변화 및 주변 국제정세 변화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변화할 것이나, 기존의 변화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기존의 중·대만관계 발전은 정치·비정치, 정부·민간차원을 철저히 분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쌍방의 첨예한 政治的 對立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대만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쌍방의 정치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할 수 있는 한계점에 이미 도달했다. 따라서 진일보한 關係發展을 위해서는 비정치·민간차원의 획기적인 관계발전과 정치적인 대립이 병존하는 불균형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쌍방이 정치적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각종 문제들이 돌출됨으로써 기존의 비정치·민간차원의 양안교류·협력마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兩岸의 통일문제가 점차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이다. 즉 현재 중국과 대만은 기존의 교류·협력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對內外的 統一基盤을 조성해야 하는 불가피한 과제를 안고 있다. 중·대만의 지도부는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수하면서도 나름대로 兩岸의 정치적 관계개선, 통일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과 통일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대만의 노력은 양안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정치·이념적인 측면에 치중했던 기존의 통일방안을 보다 현실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중국은 대만에 비해 양안의 통일문제에 보다 적극성을 보였으며,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제시했던 「一國兩制」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양안의 平和的 共存 가능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일국양제에 대한 대만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대만은 현실적으로 양안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수세적일 수 밖에 없었으나, 「反攻大陸」, 「本土收復」 등 기존의 비현실적인 구호를 지양하고 중국공산당정권을 중국대륙의 실질적인 통치실체로 인정한 바탕위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구상하였다. 대만의 國家統一綱領은 양안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대만지도부의 인식 전환의 결과물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통일방안의 현실화와 함께 양안교류·협력, 통일정책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조직을 설립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은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통일정책을 포함한 대만정책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대만은 行政院 大陸委員會를 설립하여 새롭게 설정된 대륙정책, 통일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정부간의 공식적인 접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海峽兩岸關係協會」, 「海峽交流基金會」 등 半官半民의 仲裁機構를 설립하여 양안교류·협력 확대,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보조기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 통일논의 진전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직면하여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물론 현단계에서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은 좀처럼 융합되기 어려운 차이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쌍방의 政治的地位, 統一方式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양안의 평화적 통일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통일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세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사태 추이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관계 개선 및 통일실현이라는 유사한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

는 兩岸의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양안의 統一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기본인식, 통일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정책방향, 통일정책 전담기구의 조직체계 및 인적 구성을 비교·검토하는데 중점을 두되, 남북한관계 개선,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된 시사점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序論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와 내용으로 전개된다.

第Ⅱ章은 양안의 통일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기본적인 관점, 즉 統一觀은 각자가 표방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분석에 선행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기본인식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第Ⅲ章에서는 중국의 「統一白書」와 대만의 「國家統一綱領」을 중심으로 중국과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구상배경과 내용,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통일의 原則과 基本前提, 통일정책의 推進段階, 統一中國의 未來像 등을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第Ⅳ章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국과 대만이 양안의 교류·협력 확대, 통일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구의 주요 기능, 조직체계, 인적 구성을 분석하며, 중국의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 「國務院 對臺事務辦公室」, 「海

峽兩岸關係協會」와 대만의 「國家統一委員會」, 「行政院 大陸委員會」, 「海峽交流基金會」 등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한다.

第V章은 중국과 대만이 양안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대내외적 과제들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대만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쌍방의 첨예한 대립 해소, 양안의 평화정착 등 對內的인 課題와 중·미관계의 안정적 유지, 홍콩반환문제의 합리적 해결 등 對外的 統一基盤 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분석한다.

제VI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을 종합하고 향후 통일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적 요인들을 살펴본다. 또한 중·대만의 통일문제는 역사적 배경, 쌍방의 정치·경제적 조건, 국제적 지위 및 국제사회의 인식 등에서 남북한의 통일문제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상이하다는 전제하에 남북한 통일정책과 관련된 示唆點을 제시한다.

## 第 II 章 統一에 대한 中·臺灣의 基本認識

중국과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統一政策은 양안의 통일에 대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인식의 연장선에서 형성된 것이다. 즉 중국과 대만은 양안관계 및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에 기초하여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상의 차이는 곧 統一政策像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統一觀을 이해하여야 한다.

### 1. 中國의 基本認識

#### 가. 臺灣問題의 解決

중국은 양안의 통일을 소위 「臺灣問題의 解決」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한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양안의 통일은 곧 대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안의 통일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은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sup>1)</sup>

1) 중국은 통상적으로 양안의 통일문제를 대만문제로 지칭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兩者의 統合·統一이라는 차원보다는 解放의 對象으로서 대만을 인식하여 온 기존의 입장과 양안의 통일문제를 중국의 고유한 내정으로 규정하려는 의도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만은 중국이 양안의 통일문제를 대만문제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양안간에는 中國問題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蔡政文·林嘉城, 「臺海兩岸政治關係」(臺北: 國家政策研究資料中心, 1989), pp. 132~133 참조.

중국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양안관계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만점령, 국민당이 야기한 反人民的 內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外勢의 介入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만이 중국대륙의 불가분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대만문제를 야기한 근본원인은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 중국혁명과정에서의 國共內戰이며, 1949년 이후 대만이 중국대륙에 귀속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주요 서방국가들의 內政干涉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중국공산당 제11기 3中全會(1978. 12)를 통해 양안의 통일방식을 기존의 무력적 방식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통일의 실현시기에 있어서도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즉 등소평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더 이상 양안의 통일문제를 무력적 방식을 통한 대만의 解放, 革命의 완결이라는 차원에서 강조하지는 않지만, 양안의 통일은 중국이 주도하는 대만문제의 해결방식에 의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中華民族의 最大課題로 강조하고 있다.<sup>2)</sup>

2) 鄧小平은 1980년 1월 16일 中央擴大幹部會議에서 발표한 연설 「目前的形勢和任務」에서 反霸權主義, 現代化建設과 함께 兩岸統一을 1980년대의 3대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1990년 9월 15일 鄧小平은 「共同努力, 實現祖國統一」이라는 담화를 통해 “대륙동포, 대만·홍콩·마카오동포, 海外華僑를 포함한 모든 中華民族은 조국통일과 민족진흥을 위해 공동분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鄧小平文選(第2卷)」(北京: 人民出版社, 1983), pp. 203~204; 鄧小平, “共同努力, 實現祖國統一,” 「鄧小平文選(第3卷)」(北京: 人民出版社, 1993), p. 362.

## 나. 民族統合 및 自主性 回復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국은 대만문제가 형성된 배경과 해결되지 못한 주요 요인을 중국의 자주적 역량 결여 및 그에 따른 외세의 개입과 결부시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양안의 통일을 민족통합 및 자주적 역량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홍콩 및 마카오 반환과 관련된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1984년 12월 19일 당시 국무원총리 趙紫陽과 대처(Margaret Thatcher) 영국수상간에 홍콩 반환 시일을 1997년 7월 1일 0시로 명시한 「中·英共同聲明」을 공식 채택하고<sup>3)</sup> 1990년 4월 4일 제7기 全人大 제3차 회의에서 홍콩의 반환 이후 홍콩지역에서 시행될 「홍콩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을 통과시키는 등 영국과의 홍콩반환협상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왔다. 한편 중국은 영국과 홍콩반환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 포르투갈정부와 마카오(澳門) 반환문제를 협의하여 1987년 4월 13일 趙紫陽 總理와 실바(Cavaco Silva) 포르투갈총리간에 마카오 반환시일을 1999

3) 中·英共同聲명의 정식 명칭은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不列顛及北愛爾蘭聯合王國政府關於香港問題的聯合聲明」이며, 「中華人民共和國政府對香港的基本方針政策具體說明」, 「關於中英聯合連絡小組」, 「關於土地契約」 등 3개 附屬文件을 포함하고 있다.

년 12월 20일로 명시한 반환협정에 조인하였다.<sup>4)</sup>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협상이 일단락된 이후 중국의 최대 관심은 당연히 양안의 통일문제에 집중되었으며 양안의 통일, 즉 「대만의 조국으로의 복귀」가 없이는 민족통합 및 자주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一國兩制 방식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문제를 매듭짓고 그 여세를 몰아 양안의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모종의 합의를 도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홍콩·마카오 반환협상의 타결에 만족하기 보다는 이러한 성과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양안의 통일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鄧小平은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의 홍콩반환협정 조인을 위해 北京을 방문한 대차 영국수상과의 회담에서 홍콩반환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해 좋은 先例를 남겼다는 점을 전제하고 “홍콩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一國兩制 구상은 홍콩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대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기된 것”<sup>5)</sup>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鄧小平은 “양안의 통일은 阿片戰爭 이후 대만주민을 포함한 중화민족 전체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양안의 통일이 실현되지 않으면 중국영토로

4) 마카오반환협정은 중국과 포르투갈의 「공동성명」 이외에 「中華人民共和國政府對澳門的基本政策的具體說明」, 「關於過渡時期的安排」 등 두개의 부속 문건을 포함하고 있다. 「人民日報」, 1987年 3月 27日.

5) 鄧小平, “中國是信守諾言的,” 「鄧小平文選」(第3卷), p. 102.

서의 대만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다른 국가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sup>6)</sup>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양안의 통일을 民族統合 및 自主性 回復, 領土保存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의 잔재인 홍콩·마카오 반환문제의 진전을 계기로 양안의 통일문제에 더욱 관심을 경주하고 있다.<sup>7)</sup>

#### 다. 조건부 平和的·漸進的 統一

1949년 이후 중국은 양안의 통일문제를 選擇의 문제가 아닌 當爲의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등소평체제 출범 이후 통일방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즉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양안의 통일을 대만문제의 해결 및 민족의 자주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平和的이고 漸進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 鄧小平, “會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基礎委員會委員時的講話,” 「人民日報」, 1987年 4月 17日.

7) 최근 중국 최고지도부의 각종 연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있는 사항은 비단 대만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련된 각종 현안의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主權, 中華민족의 尊嚴性·自負心”이 결코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一例로 1993년 12월 26일 ‘毛澤東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江澤民은 시종일관 “阿片戰爭 이후 지금까지 중국인민의 일관된 목표는 국가와 민족의 獨立·統一·民主·富強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霸權政治·強權政治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江澤民, “在毛澤東同志誕辰一百周年紀念大會上的講話,” 「人民日報」, 1993年 12月 27日.

중국이 양안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된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은 대만의 정치적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대만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에 주목하여 국민당정부만을 협상의 유일한 대상으로 인식하던 기존의 방침을 바꾸고 대만내의 각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소위 「對臺灣工作」을 보다 체계있게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다. 둘째, 中·美修交에도 불구하고 대만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셋째, 四個現代化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상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중국은 “양안의 통일문제가 좀 늦게 해결되더라도 大勢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8)</sup>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統一方式 및 과정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인식은 대만이 형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안의 통일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은 武力에 의한 급격한 통합방식을 지양하고 평화적인 협상에 의한 점진적인 통일방식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8) 鄧小平, “在中央顧問委員會第三次全體會議上的講話,” 「鄧小平文選」(第三卷), p. 87.

한편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 대만의 독립추구 경향이 더욱 고조되고, 결과적으로 兩岸의 統一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양안의 평화적·점진적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유보하는 동시에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二重的 政策을 취함으로써 대만의 독립움직임을 봉쇄하고 자신들의 평화적·점진적 통일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sup>9)</sup>

이처럼 중국은 기본적으로 양안의 통일은 평화적·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臺灣政府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실상부하게 견지하고 대만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 2. 臺灣의 基本認識

### 가. 民族의 團結과 富強 實現

1988년 1월 蔣經國의 사망과 李登輝의 총통직 승계에 따른 대만내의 정치적 상황변화 및 국민당의 위상변화와 함께 양안

9) 중국은 “평화적 방식에 의한 대만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여야 하지만, 이는 결코 비평화적인 방식의 사용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楊尙昆, “臺灣自古就是中國領土, 決不坐視任何分裂行徑,” 「人民日報」, 1991年 10月 10日; 汪道涵(海協會會長)의 워싱턴 기자회견(1993.5.30), 「中央人民廣播電臺」, 1993年 6月 1日 (06: 30 뉴스).

의 통일에 대한 대만정부의 인식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즉 과거 철저한 반공이념에 바탕을 둔 소위 본토수복차원에서 통일문제를 인식했던 대만은 蔣介石, 蔣經國으로 이어진 蔣氏일가의 통치 종식 이후 정치·이념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양안의 통일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만내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만주민들의 對대륙 인식 변화도 대륙정책, 통일문제에 대한 대만정부의 인식전환을 촉진한 요인이었다.<sup>10)</sup>

그러나 이등휘체제의 출범 이후 양안의 통일문제에 대만정부의 인식이 현실화되었다고 해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다. 즉 대만정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은 비현실적·감상적인 통일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며, 통일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만정부는 여전히 중국의 統一과 富強은 해외동포를 포함한

10) 과거 국민당정부는 정치적 규제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포함한 對大陸정책결정·추진과정에서 일반주민의 의견이나 입장이 개재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봉쇄해왔다. 즉 양안관계가 國家의 存亡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은 국민당 최고수뇌부의 독점적인 소관사항으로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국민당정부의 권력구조 개편과 野黨의 허용(1986. 9), 戒嚴解除(1987. 7. 14), 정상적인 憲政을 제한해 온 헌법상의 비상시기 임시조항(動員勸亂時期臨時條款)과 반란처벌조례(懲治叛亂條例)의 폐지(1991. 5) 등 대만의 정치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양안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당 수뇌부의 독점적인 영역이 점차 축소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제반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당과 대립하고 있는 民進黨과 같은 야당 및 이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재야 정치세력은 물론 대륙과의 교류·협력확대를 추구하는 기업계, 지식인·학생,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양안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각자의 입장과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모든 중국인의 한결같은 염원인 동시에 중화민족의 團結과 共同努力을 통해 조속히 실현하여야 할 역사적 使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11)</sup>

#### 나. 民主·自由·均富의 통일국가 건설

대만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양안의 통일을 민족적 사명으로 강조하면서도 양안의 통일과 관련된 많은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이 1991년 3월 공포한 「國家統一綱領」 전문은 “해협양안은 理性·平和·對等·互惠의 전제하에 적절한 기간의 交流·合作·協商을 통해 民主·自由·均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통일중국을 再建한다”<sup>12)</sup>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곧 대만이 설정하고 있는 통일정책 추진 및 통일실현의 기본전제이다. 대만의 이러한 입장은 양안의 통일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기는 하지만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民主·自由·均富가 실현될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양안의 통일은 중국과 대만이 대등한 위치에서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協商過程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11) 臺灣行政院 大陸委員會, 「大陸工作手冊(1권)」(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1), pp. 壹-1~壹-6; 黃昆輝, 「國統綱領與兩岸關係」(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3), pp. 3~7 참조.

12) 國立編譯館(編), 「國家統一綱領與大陸政策」(臺北: 國立編譯館, 1993), pp. 82~84.

대만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통일의 전제조건들은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중국은 대만정부의 진정한 통일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사실 대만정부가 주장하는 통일을 위한 기본전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의 對대만 무력사용 포기를 통한 양안의 확고한 평화정착(平和), 대만의 정치적 지위 보장(對等)과 중국의 政治民主化 등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정부가 통일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양안의 통일을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만의 정치적 독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政治的地位와 安保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제기하는 통일협상에 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대만은 자신들이 통일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는 民主·自由·均富가 실현될 수 없는 중국의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만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공산당이 政治的民主化, 經濟的自由化, 社會的多元化에 매진하지 않는 한 양안의 통일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13)</sup>

13) 대만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관해서는 李登輝, “開創中華民族新時代,” 「大陸工作手冊」(一卷), pp. 壹-17~壹-18; 郝柏村, “在1992年大陸工作會議上的行政院長致詞,” 「八十一年大陸工作會議實錄」(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3), pp. 47~53 참조.

### 第Ⅲ章 中·臺灣의 統一政策

양안의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에서 나타나듯이 중국과 대만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한결같이 통일의 必要性和 當爲性を 강조하고 있다. 다만 통일의 기본전제가 상이하고 각자의 입장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과 대만은 자신들이 설정한 統一政策의 설득력을 제고하고 양안관계의 기본구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정책의 기본방향, 정책목표, 추진 과정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양안관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감안하여 기존의 입장과 원칙에 보다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統一白書」와 대만의 「國家統一綱領」을 중심으로 중·대만의 통일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안의 통일 가능성과 양안관계의 전반적인 변화 방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 1. 中國의 統一政策

양안의 정치적 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과 「一國兩制」 통일방식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민간차원의 양안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향후 정치적인 관계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대만의 독립움직임과 관련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 대만의 정치적 실체확보를 겨냥한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정부」(一國兩府) 및 이와 유사한 「하나의 국가, 두개의 지역」(一國兩區) 등 一國兩制에 위배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중·대만 통일정책의 핵심은 하나의 중국, 평화적 통일, 대만의 자치권 보장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一國兩制 統一方案이다.

#### 가. 一國兩制 통일방안의 背景

중국의 一國兩制 통일방안은 등소평체제의 출범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또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즉 중국은 등소평체제 출범 이후 자신들의 대내외 정책변화 및 주변 국제정세에 맞추어 통일정책을 포함한 기존의 대만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平和統一, 대만의 자치권 보장 등을 전제로 한 일국양제 통일방안이다.

중국이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구상·제의하게 된 배경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四個現代化를 최우선적인 國策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중국의 四個現代化政策은 총체적인 경제발전 우선 정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내외적 정책방향을 대

대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야심적인 국가발전전략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내적인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兩岸關係 및 對美關係, 對日關係 등 주요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필요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전환을 추진하였다. 경제발전에 최대의 역량을 집중하고 대외정책을 포함한 기타 정책은 이를 보조·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등소평 체제의 개혁·개방정책은 자연스럽게 홍콩·마카오·대만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통일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sup>14)</sup> 또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정치·이념적인 통일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새로운 통일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sup>15)</sup>

둘째, 중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四個現代化政策의 성공여부가 대내적인 政治的 安定과 對外開放을 통한 서

14) 鄧小平은 1980년 1월 16일의 中央幹部會議에서 1980년대 중국이 수행하여야 할 3대 임무로 反霸權主義, 祖國의 統一, 現代化建設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이 중에서 “현대화건설은 중국의 각종 대내외 문제해결에 관건이 되는 핵심적인 임무”라고 강조하였다.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鄧小平文選」(1975~1982) (北京: 人民出版社, 1983), pp. 203~204 참조.

15) 毛澤東 사후 중국의 지도층은 기존 정치·경제체제의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는 동시에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보다 냉철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대외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매우 이성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특히 對臺灣政策에 있어서도 ‘零和게임’(Zero-Sum Game)방식이 아닌 ‘투입-산출’(Input-Output)의 이성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 중국지도부의 이러한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宦國蒼, “北京調整對臺政策,” 「九十年代」, 1986年 3月號, pp. 44~47 참조.

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달려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대내적인 문제이면서도 대외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에서 對대만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하였다. 즉 중국은 당장의 통일은 불가능하더라도 대만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완화시키고 양안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四個現代化政策 추진에 필요한 대만의 資本과 技術을 유입하는 동시에 향후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만정책을 전환하였다.

중국이 1978년 12월 11기 3中全會에서 대만과의 평화통일 방침을 확정한 이후 중국의 對대만정책 변화가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1979년 1월 1일 全人大 常務委員會가 발표한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이다. 여기에서 중국은 평화통일을 위한 양안의 군사대결 및 분열상황의 조속한 종식과 양안의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의 협상을 제안하면서 대만의 현존 사회·경제체제를 존중하고 대만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sup>16)</sup> 全人大 常務委員會의 제의를 시작

16) 이 밖에도 중국은 대만이 점령하고 있는 福建省의 金門島와 馬祖島에 대한 포격을 중지함과 동시에 양안의 「三通」추진과 친지방문, 관광, 학술문화단체, 체육관계자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자고 강조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告臺灣同胞書,” 「人民日報」, 1979年 1月 1日; NPC Standing Committee, “Message to Compatriots in Taiwan,” *Beijing Review*, no. 1 (January 5, 1979), pp. 16~17 참조.

으로 중국은 1981년 9월 葉劍英 全人大 常務委員長の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9개항 건의」(1981. 9. 30)<sup>17)</sup>, 鄧小平의 「조국통일 6개 원칙」(1983. 6. 26)<sup>18)</sup> 등 양안의 통일, 양안관계와 관련된 각종 제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들 제의는 구체적으로 一國兩制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① 대만문제의 平和的 解決, ② 대만정권의 존속과 自治權 인정, ③ 대만의 기존 사회·경제체제 및 주민의 生活方式 維持, ④ 대만의 軍事力 保有, ⑤ 黨對黨 談判을 통한 3차 國共合作 실현 등 대만문제의 해결방식 및 양안의 교류·협력에 관한 일국양제의 기본구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17) 葉劍英이 全人大 常務委員長 명의로 발표한 「평화통일 9개 방침」(關於臺灣回歸祖國實現和平統一的方針政策)은 兩岸의 三通四流를 강조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3차 國共合作을 위한 쌍방 대표의 파견, ② 通郵·通商·通航·친척방문·학술교류·문화교류·체육교류, ③ 特別行政區로서 대만의 自治權 및 軍事力 保有 허용, ④ 대만의 현행 社會·經濟體制, 生活方式의 보장 및 외국과의 經濟·文化關係 허용, ⑤ 臺灣當局者 및 각계 인사의 中央政府 참여 허용, ⑥ 대만의 재정곤란시 中央政府의 財政支援 보장, ⑦ 대만주민의 大陸移住와 自由往來 허용, ⑧ 대만기업의 大陸投資 허용 및 合法的인 權益·利潤 보장, ⑨ 祖國統一을 위한 대만 각계 각층의 建議 환영. 「人民日報」, 1981年 10月 1日 참조.

18) 「조국통일 6개 원칙」은 1983년 6월 26일 鄧小平이 在美 중국계 학자 楊力宇 교수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조한 것으로서 통일 이후 ① 중국 軍事·政府要員의 대만파견 금지, ② 대만의 독립적인 立法權 및 現行 法律·司法機構의 유지, ③ 대만의 독자적인 軍隊 유지(대륙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④ 대만의 對外事務 처리권한 유지, ⑤ 대만의 特別旗幟 및 「中國臺灣」 칭호 사용, ⑥ 외국으로부터의 武器購入을 포함한 대만의 自衛權 허용 등이다. 그러나 1983년 7월 29일 新華社의 공식보도에서는 제6항 대만의 武器購入과 自衛權 허용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鄧小平의 「조국통일 5개 원칙」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楊力宇, “鄧小平對和平統一的最新構想,” 「七十年代」, 1983年 8月號, pp. 17~19 참조.

셋째,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안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中國은 1982년 9월 대처 영국수상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영국과의 홍콩반환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홍콩반환협상의 성패여부가 마카오 및 대만문제 해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sup>19)</sup> 따라서 중국은 영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영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홍콩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결집된 것이 一國兩制 方案이다.<sup>20)</sup> 이는 1997년 7월 1일 홍콩의 반환 이후 일정 기간동안의 과도기를 통해 홍콩의 기존 정치·경제체제를 존속시킴으로써 반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홍콩이 갖고 있는 經濟的 力量을 확대·발전시키고자 한 것이었다.<sup>21)</sup>

이처럼 중국이 새로운 통일방식으로서 구상한 일국양제는 등소평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변화 및 국제정세 변화의 복합적인 영향하에서 형성되었다. 또한 一國兩制 統一 方案은 중국이 영국과의 홍콩반환협상을 순조롭게 타결하는

19) 홍콩문제와 대만문제의 연계성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인식은 C. L. Chiou, "Dilemmas in China's Reunification Policy toward Taiwan," *Asian Survey*, vol. XXIV, no. 4 (April, 1986) pp. 469~471 참조.

20) 蔡政文·林嘉誠, 「臺海兩岸政治關係」(臺北: 國家政策研究資料中心, 1989), pp. 43~44.

21) 중국의 이러한 의도는 1982년 9월 대처 영국수상과 鄧小平의 회담내용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자리에서 鄧小平은 "홍콩의 번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홍콩의 기존 정치·경제제도 및 대부분의 법률을 계속 보류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鄧小平, "我門對香港問題的基本立場," 「鄧小平文選」(第3卷), pp. 13~14.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하여금 향후 대만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개혁·개방을 통한 四個現代化政策과 더불어 鄧小平의 탁월한 정치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sup>22)</sup>

#### 나. 一國兩制 통일방안의 基本構想

중국은 1979년 이후 대만에 대한 각종 제의를 통하여 일국양제와 유사한 내용들을 간헐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일국양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一國兩制의 구체적인 내용은 1983년 6월 鄧小平이 중국계 재미학자 楊力宇 교수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鄧小平은 1984년 6월 홍콩기업인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一個國家, 兩種制度」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일국양제 구상의 대체적인 윤곽이 잡혔음을 보여주었다.<sup>23)</sup>

22) 한편 최근 중국지도부 일각에서는 一國兩制 통일방식이 완전히 鄧小平의 창조적인 구상이 아니고 毛澤東이 이미 1960년대 초에 일국양제와 매우 유사한 통일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人民日報」 1994년 2월 27일자에서는 “1960년 5월 22일 毛澤東同志와 黨中央은 국제정세와 양안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대만이 대륙과 통일할 경우 外交權을 제외한 모든 軍政大權과 人事權은 蔣介石이 장악하고, 모든 軍政費用 및 建設費用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쌍방은 官吏를 상호파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만문제, 對臺工作 기본방침을 제기했다는 회고록 성격의 글을 게재하였다. 陽親華·王明鑒, “毛澤東與對臺工作,” 「人民日報」, 1994년 2월 27일 참조.

23) 鄧小平은 홍콩기업인들을 접견하면서 “一個國家, 兩種制度 구상은 중국의 실정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中華人民共和國내에서 사회주의 제도에

이처럼 중국의 일국양제 구상은 1979년 이후 중국의 대내외정책 변화, 국제정세 변화 추이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형성·보완되어 왔으며, 중국의 國務院이 1993년 8월 31일 발표한 「統一白書」(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는 기존의 모든 논의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대만문제 해결 및 양안의 통일을 위한 기본방침으로서의 일국양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1)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일국양제 통일방안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세계상의 중국은 오직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며, 중국의 中央政府는 北京에 있다”<sup>24)</sup>는 것이다. 즉 중국은 1979년 1월 1일 全人大 상무위원회의의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발표 이후 1994년 3월 10일 제8기 全人大 2차회의 政府工作報告에 이르기까지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언급하는 모든 공식 문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간 통일문제 논의의 기본전제로 강조하고 있다.<sup>25)</sup>

---

를 실시하고 홍콩·대만에서는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鄧小平, “一個國家, 兩種制度,” 「鄧小平文選」(第三卷), pp. 58~59.

24)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國務院 新聞辦公室, 「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人民日報」, 1993年 9月 1日.

25) 예를 들어 李鵬 總理는 8기 全人大 2차회의 정부공작보고 제6장 「積極促進祖國和平統一」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위배하여 조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모든 행위는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저버리는 것인 동시에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李鵬, “第八屆全人大第二次會議政府工作報告,” 「人民日報」, 1994年 3月 24日.

이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은 1971년 10월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제2758호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合法政府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유일·합법정부로서의 자신들의 지위와 중국의 일부분으로서의 대만의 지위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양안주민 모두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소위 대만의 「自決」문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이 세계의 공인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중국인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는 대만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臺灣獨立 주장을 일축하는 동시에 대만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셋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전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대만이 중국의 主權과 領土의 분열을 초래하는 「두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一國兩府」 등을 추진할 경우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중국은 양안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불변의 鐵則으로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등소평체제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대만정책을 전환하고 각종 전향적인 조치를 제의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 (2) 두제도의 공존(兩制共存)

상이한 두제도의 공존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더불어 일국양제 통일방안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 중국은 두제도의 공존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 의미를 “하나의 중국의 전제하에 대륙의 社會主義制度和 대만의 資本主義制度가 장기간 共存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서로가 상대방을 파멸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통일 이후 중국 국가체제의 커다란 특징”<sup>26)</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신들이 두제도의 공존을 통일방안의 주요 부분으로 설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만의 현실과 대만주민들의 실제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두제도의 공존을 강조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중국과의 정치·경제체제 통합에 대한 대만주민들

26) 鄧小平, “一個國家, 兩種制度,” 「鄧小平文選」(第三卷), p. 58.

의 不安心理를 最小化함으로써 자신들이 제기하는 일국양제 통일방안에 대한 拒否感을 弱化시키고, 둘째, 대만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 역량의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 이후 대만의 기존 사회·경제 제도의 불변, 생활방식의 불변, 대외경제관계의 불변을 강조하고, 특히 대만주민들의 사유재산·주택·토지·기업소유권 및 화교·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약속함으로써 양안의 통일에 대한 대만주민들의 불안감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이 제기하는 통일방안의 설득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방향과 의도는 이미 홍콩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누차 강조되었다. 즉 중국은 영국과의 홍콩반환협상을 추진하면서 홍콩의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도 一國兩制 방식에 따라 홍콩의 기존 자본주의체제와 그에 부수적인 각종 제도는 그대로 존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홍콩에 대한 모든 정책은 홍콩의 繁榮과 安定 유지를 전제로 실시될 것이며, 만약 일부 기존의 정책이 변한다면 이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홍콩주민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sup>27)</sup>

이처럼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 이후 兩岸이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의

27) 홍콩반환 이후 기존 制度·政策의 불변과 홍콩주민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입장은 鄧小平, “保持香港的繁榮和穩定” 「鄧小平文選」(第三卷), pp. 72~73 참조.

공존을 통하여 대만의 번영과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3) 고도의 자치권 부여(高度自治)

중국이 일국양제 통일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高度의 自治權은 정치적인 통합하에서 두제도의 공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 이후 대만으로 하여금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대륙과 다른 資本主義制度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1980년대 초에 통일 이후 대만에 대한 자치권 부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표명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983년 6월 鄧小平은 “대만의 완전한 자치는 두개의 중국을 의미하므로 실현 불가능하며 일정한 한계를 갖는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다”<sup>28)</sup>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통일 이후 대만은 하나의 地方政府일 수 밖에 없으나, 중국대륙과 다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향유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중국은 통일 이후 대만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문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特別行政區」 개념을 도입했다. 즉 중국은 “통일 이후 대만은 중국의

28) 鄧小平, “中國大陸和臺灣和平統一的構想,” 「人民日報」, 1983年 7月 30日 참조.

특별행정구로서 기타 다른 省·民族自治區와 다른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sup>29)</sup>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統一白書」에서도 통일 이후 臺灣特別行政區의 자치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은 行政管理權, 立法權, 司法權 및 終審權을 향유한다. 둘째, 黨, 政, 軍, 經, 財政 등에 대한 자율적 管理權을 향유한다. 셋째, 외국과의 商務·文化協定 체결권 및 일정 정도의 外事權을 향유한다. 넷째, 독자적인 軍隊를 보유하며 중국대륙은 군대는 물론 행정관리를 파견하지 않는다. 다섯째, 특별행정구 정부 및 대만내 각계 인사는 國家機構의 지도적 직책 및 전국적인 사무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sup>30)</sup>

#### (4) 평화적 협상(和平談判)

이상에서 언급한 3개의 기본구상이 통일 이후 一國兩制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면 양안의 평화적인 협상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의미한다.

중국은 1979년 이후 대만에 대한 각종 제의에서 거의 예외 없이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의 黨對黨 談判을 통한 「제3차

29) 중국은 特別行政區 설치와 관련하여 1982년 12월 5기 全人大 제5차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킨 중국헌법 제31조에 특별행정구 설치 규정을 명문화했다. 즉 중국헌법 제31조는 “국가가 필요시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全人大에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中國年鑑」(北京: 新華出版社, 1986), p. 11 참조.

30) 「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人民日報」, 1993年 9月 1日.

國共合作」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이 무력적 방식에 의한 대만의 통일을 지양하고, 양안의 통일을 대만의 해방이 아닌 평화적 방식에 의한 漸進的 統合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의 「統一白書」에서도 평화적 협상을 일국양제 구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적 통일은 全民族의 大團結, 全中國의 振興과 富強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대만의 사회·경제적 안정·발전에 유리하다. 둘째, 양안의 적대관계 종식,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쌍방의 조속한 접촉·협상이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하나의 중국의 전제하에 協商方式, 협상에 참여하는 黨派·단체·각계 대표자 선정, 대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sup>31)</sup>

넷째, 평화적 협상을 촉진하는 일환으로 相互尊重·互補互利的 원칙에 따라 양안의 경제합작 및 각종 교류를 적극 추

31) 중국이 대만과의 협상과 관련하여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어떠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대만과의 협상정책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정책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 중국은 국민당과의 黨對黨 談判에 비중을 두었으나 국민당의 「臺灣化」, 民進黨을 중심으로 한 野團의 급성장 등 대만정국의 변화상황을 감안하여 協商 對象, 議題 등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江澤民 총서기는 199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政治報告를 통해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양안의 정식담판을 포함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과 논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쌍방이 공감하는 적합한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 국무원 臺灣辦公室 副主任 唐樹備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협상에 대만 民進黨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人民日報」, 1992년 10월 16일; 「聯合報」(臺灣), 1993년 2월 7일 참조.

진하고 三通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중국은 양안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만과의 평화적 협상을 중시하면서도 대만문제는 남북한, 동서독 문제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양안의 평화적 협상과 관련하여 한국·독일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데는 평화적 협상을 통한 양안의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간섭의 여지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즉 중국은 한국·독일문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國際協議에 의해 형성된 것인데 반해 대만문제는 중국 內部問題이며, 따라서 양안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32)</sup>

## 2. 臺灣의 統一政策

### 가. 國家統一綱領의 제정 배경

1949년 이후 198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대만은 오직 反共理念에 입각한 「本土收復」을 강조하여 왔을 뿐 양안의 통일문제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명시한 통일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만은 198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양안의 통일문제를 현실

32) 중국은 「統一白書」에서도 “대만문제와 한국·독일문제는 역사적인 형성 배경 및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문제를 함께 거론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人民日報」, 1993年 9月 1日 참조.

적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접근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즉 대만은 1979년 이후 중국이 제시한 일련의 臺灣政策이 ‘평화를 위장한 통일전선의 일환’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입장에 기초한 통일방안과 대륙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대만정부의 이러한 정책전환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각종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平和攻勢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주민의 내부적인 동요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국민당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고려하에서 대만은 1981년 4월의 국민당 제 12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삼민주의에 의한 중국통일 방안」(三民主義 統一方案으로 약칭)을 확정하고 통일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정치적 民主, 경제적 平等, 사회적 多元화를 중국 전역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삼민주의 통일방안은 대만이 과거의 비현실적인 통일관을 지양하고 새로운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과도기에서 제시된 통일방안으로서 대만이 양안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식을 어느 정도 탈피한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민주의 통일방안은 여전히 理念的·感想的인 認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이념으로서 삼민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치중하였다.<sup>33)</sup> 따라서 장경국 사후의 李登輝정부

33) 三民主義 統一方案의 정식명칭은 「貫徹以三民主義統一中國方案」이며, 핵심적

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확대된 양안간 교류·협력과 이에 따른 양안관계의 변화, 주변 국제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삼민주의 통일방안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국 대만은 대내외적 상황변화와 양안관계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방안 제정 필요성에 직면하여 총통부 직속의 「國家統一委員會」를 설립하는 동시에 대륙정책 및 양안의 통일문제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國家統一綱領」을 공포하였다(1991. 3). 국가통일강령은 삼민주의에 의한 통일방안에 비해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양안의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단계별 정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즉 대만은 國家統一綱領을 통하여 삼민주의 통일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10년간의 양안관계 변화 및 주변 국제정세 변화 등 양안의 통일환경 변화를 직시하고 통일정책을 포함한 향후 대륙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

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민주의를 통해 自由·民主·均富의 新中國을 건설해야 하며 이는 국내외 모든 중국인의 일치된 염원이다. 둘째, 1949년 이후 국민당이 대만에서의 삼민주의 실천을 통해 얻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성과는 오직 삼민주의만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따라서 삼민주의는 大陸光復, 統一國家建設의 靑寫眞이다. 셋째, 삼민주의로 통일된 중국만이 자유·민주를 애호하는 국가들과 상호 신뢰의 바탕위에서 협력할 수 있다. 넷째, 삼민주의를 통한 중국의 통일실현은 중국국민당이 추구해야 할 目標이자 責任이다. 삼민주의 통일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行政院 大陸委員會, 「大陸工作手冊」(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1), pp. 壹-1~壹-5 참조.

## 나. 國家統一綱領의 주요 政策方向

### (1) 統一의 目標

대만이 국가통일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의 목표는 “民主·自由·均富에 바탕을 둔 하나의 통일된 중국 건설”이다. 이는 곧 중·대만이 理性·平和·對等·互惠의 전제하에 일정한 기간의 교류·합작·협상 및 민주·자유·균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중국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만이 설정하고 있는 이러한 통일목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政治民主化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정당정치, 자유선거, 지방자치 등을 실시하여 中國大陸의 정치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經濟自由化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자유화가 담고 있는 의미는 곧 사유재산 보장,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시장기능에 따른 자율적 가격메커니즘 보장 등이다.

셋째, 社會的 多元化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여론의 개방, 정보의 공유, 사회적 발전경로의 다원화 등을 통해 중국과 대만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 (2) 統一의 原則

대만은 양안의 통일이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통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대륙과 대만은 모두가 중국의 영토이며 국가의 통일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인의 공통된 책임이다. 여기에서 강조한 '대륙과 대만은 모두가 중국의 영토'라는 의미는 중국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이 지칭하는 중국은 대륙의 현 중국공산당정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대만은 중국이 대륙의 共產黨政權과 대만의 中華民國政權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각자는 독자적인 통치권을 가진 政治實體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만이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정치실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현재의 양안관계를 「一國兩區」(One Country, Two Regions)로서 규정한 바탕위에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sup>34)</sup>

둘째, 중국의 통일은 전국민의 福祉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黨派간의 政爭에 의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곧 지리적으로 두개의 통치지역으로 존재하는 양안의 현상황(즉 一國

34) 「一國兩區」 개념은 1990년 6월 대만의 「國是會議」에서 당시 행정원 부원장이던 施啓揚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중국은 하나지만 현실적으로 大陸地區와 臺灣地區로 분할되어 각자가 독자적이고 대등한 정치 실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一國兩區」 개념은 1980년대 말 대만의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어 온 「一國兩府」(One Country, Two Governments) 개념을 다소 변형·발전시킨 것이다. 즉 대만은 중국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一國兩制 통일방안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중국과 두개의 대등한 정부'를 의미하는 「一國兩府」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개념이 명확치 않고 '대등한 정부'에 중국의 반응이 극히 예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一國兩府 대신에 一國兩區를 양안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兩區)을 인정하고 각자가 정치·경제개혁을 통해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면적으로는 대만이 통일정책을 과거의 「反攻大陸」(군사력을 통한 大陸의 收復을 의미함)에서 평화통일 방식으로 전환한 만큼 중국도 진정한 평화통일 의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sup>35)</sup>

셋째, 중국의 통일은 中華文化의 昂揚, 인간의 尊嚴性 守護, 기본적 人權의 保障, 民主·法治의 實踐을 기본이념으로 해야 한다. 세번째 원칙에서 강조하는 것은 양안의 통일이 결과적으로 대만의 현행 정치·경제·사회제도가 대륙의 공산정권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의 통일은 그 時期와 方式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만지역 주민의 權益·安全·福祉를 존중하고 理性·平和·對等·互惠의 원칙하에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우선 양안의 통일과정에서 대만주민의 權益과 安全·福祉, 生活方式이 保護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정치·경제·사회체제가 상이한 양안의 통일은 장기적이고 힘든 政治的 工程이라는 점에서 漸進的·段階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36)</sup>

35) 國立編譯館, 「國家統一綱領與大陸政策」(臺北: 國立編譯館, 1993), pp. 8~9  
참조.

36) 黃昆輝, 「國統綱領與兩岸關係」(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3), pp. 4~5  
참조.

### (3) 統一의 推進 段階

#### (가) 제1단계: 交流·互惠段階

- ① 양안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互惠의 정신으로 敵對感을 解消하며, 교류과정에서 상대방의 安全·安定을 위협하지 않고, 상대방의 政治實體를 인정함으로써 우호적인 상호관계를 확립한다.
- ② 양안의 交流規範 제정, 仲裁機構 설립 등을 통하여 交流秩序를 확립하고 양안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각종 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民間交流를 擴大함으로써 양안의 사회적 번영을 촉진한다.
- ③ 국가통일의 목표하에 양안주민의 福祉를 增進한다. 특히 대륙지역은 經濟改革, 輿論의 開放, 政治民主化를 실현해야 하며, 대만지역은 憲政改革, 국가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均富의 사회를 건립하여야 한다.
- ④ 양안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평화적인 방식으로 모든 쟁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상호존중, 배타적인 태도를 지양함으로써 相互信賴·合作段階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交流·互惠段階는 국가통일강령이 설정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단기적인 목표이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항은 중국과 대만이 대륙·대만을 각각 통치하는 정치실체로서의 지위를 상호인정하는 동시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양안의 진정한 平和定着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중국이 대만의 정치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양안의 적대감 해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등 제1단계에서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37)</sup>

(나) 제2단계: 相互信賴·合作段階

- ① 정부차원의 대등한 양안간 接觸窓口를 확립한다.
- ② 양안의 通郵·通航·通商, 즉 소위 三通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중국대륙의 東南沿岸 및 기타 지역의 共同開發을 추진하여 양안주민의 생활수준 격차를 축소한다.
- ③ 양안이 상호협력하여 國際組織·活動에 참여한다.
- ④ 고위지도자의 相互訪問을 통하여 統一協商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국가통일강령에서 설정하고 있는 제2단계 진입의 전제조건은 제1단계에서 양안의 상호신뢰·합작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대만의 정치실체를

37) 黃昆輝, “國家統一綱領的要旨與內涵,” 「中國大陸研究」, 第34卷 12期(1991年 12月), pp. 5~9 참조.

인정하고 무력사용을 포기하는 것이 제2단계 진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제2단계 통일정책의 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양안의 공식적인 접촉창구 확립은 제1단계에서 추진된 민간차원의 교류를 정부간 접촉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38)</sup> 한편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안의三通에 대한 대만의 공식적인 입장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삼통을 앞당길 수도 있으나, 정치·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제1단계에서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3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상호협력은 국제적 지위·역할을 확대하려는 대만의 「彈性外交」 정책과 관련을 갖는데, 문제의 관건은 이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sup>39)</sup> 마지막으로

38) 양안의 공식적인 접촉창구의 성격에 대해 중국과 대만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은 자신들이 계속 제기해 온 「黨對黨 談判」을 양안간 공식적인 접촉의 전형적인 형태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執政黨이 양안관계 및 통일과 관련된 협상을 총괄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통일협상은 반드시 대등한 「政府對 政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黃昆輝, 「國統綱領與兩岸關係」, p. 7.

39) 중국은 대만의 탄성외교정책이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一中一臺)을 조장하기 위한 反統一的 行爲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은 국가통일강령에서 이미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한 바와 같이 대만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은 향후 중국의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사회가 중국이 잠정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만은 대만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만독립 움직임의 근원적인 책임은 중국이 대만의 국제적 활동을 방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黃昆輝, 「國統綱領與兩岸關係」, pp. 14~15; 「李登輝總統記者會有關大陸政策部分」, 「大陸工作手冊」(第1卷), p. 壹·21 참조.

제4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위지도자의 상호방문을 통한 통일 협상의 여건 조성은 제2단계 통일정책을 종결짓는 동시에 제3단계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은 양안의 고위지도자가 상호방문하는 단계에 이르면 이미 각분야에서의 양안간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된 시점이며, 쌍방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방문인사를 선정하고 상호대등한 신분으로 방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 (다) 제3단계: 統一協商段階

국가통일강령에서 설정하고 있는 단계별 정책 추진의 마지막 단계인 통일협상단계는 양안이 통일협상기구를 설립하고 양안주민의 염원에 의거하여 政治的 民主, 經濟的 自由, 社會的 公平 및 軍隊의 國家化(軍이 黨의 통제를 받지 않는 國軍化를 의미)라는 원칙하에 통일대업을 함께 논의하며, 憲政體制를 구상함으로써 민주·자유·균부의 중국을 건립하는 단계이다.

### 3. 中·臺灣 統一政策의 比較·分析

중국과 대만이 「統一白書」, 「國家統一綱領」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안의 통일정책은 각자가 설정하고 있는 통일의 기본전제 내지는 출발점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각적으로 비교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중국이 시종일관 양안의 통일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강

조하고 있는 「一國兩制」 통일방안은 양안의 통일 이후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는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에 중점을 두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만의 국가통일강령은 외형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통일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 우선 중국으로부터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보장받고 양안관계를 「一國兩區」로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시하는 일국양제 통일방안의 기본구상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 가. 統一의 原則 및 基本前提

### (1) 하나의 중국

중국과 대만은 적어도 외면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즉 통일의 時期와 方式 및 條件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양안의 분열상태를 종식하고 통일된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국양제 통일방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불변의 철칙으로 인식하는 반면, 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에 비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집착이 강하지 않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統一白書」에서 세계상의 중국은 오직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며, 北京政府가 중국을 대표하는 唯一·合法政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만독립 움직임과 관련된 소위 대만의 自決問

題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못박고 있다.

반면에 대만은 국가통일강령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대륙과 대만은 모두가 중국의 영토’이며, 국가의 통일을 촉진하는 것은 중국인의 공통된 책임이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이 중국통일의 당위성은 인정하되, 그와 함께 중국이 1949년 이후 대륙과 대만이 독립된 통치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sup>40)</sup> 즉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대륙과 대만이 모두 중국의 영토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一國兩區 개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중국에 대해 대만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정한다는 비난의 구실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모든 통일 논의의 기본전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 一國兩制와 一國兩區

일국양제와 일국양구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방안을 대표하는 동시에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방향이 집약적으로 표현

40) 대만은 1949년 이후 중국이 大陸과 臺灣·澎湖·金門·馬祖의 독립된 통치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현실을 「一國家·兩地區·分治」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一個中國問題的評析,” 「中共問題資料週刊」, 517期 (1992年 5月 4日), pp. 1~3 참조.

된 개념이다. 일국양제와 일국양구의 「一國」이라는 표현자체에서 나타나듯이 중국과 대만은 모두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별다른 대립이 없다.

반면에 「兩制」와 「兩區」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방안에서 일국이 통일정책의 대전제라고 한다면 兩制는 중국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양안관계의 定型이다. 즉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통일중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의 중국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제도가 공존하는 것이지, 결코 독립적인 정치적 지위를 갖는 두개의 정치실체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대만이 표방하는 「兩區」는 중국이 강조하는 것처럼 한 국가내에서 두제도가 단순히 공존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대만이 인식하는 兩區는 단순히 대륙의 사회주의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가 主從, 中央·地方의 관계로서 불균형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통치지역 통치권을 가진 두개의 정치실체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만은 자신들이 北京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쉽사리 지위가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취약점을 갖는 「特別行政區」로서 지위가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강조하는 「兩制의 共存」과 대만이 주장하는 「兩區의 共存」은 중·대만 모두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함

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갈등요인을 갖고 있다. 이는 곧 양안 관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로 규정하려는 중국과 두 개의 대등한 정부 혹은 지역의 관계로 설정하려는 대만간의 근본적인 입장차이에서 비롯된다.<sup>41)</sup>

### (3) 統一方式

1979년 이후 중국은 대만문제의 해결방식을 기존의 무력적 해결방식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대만 역시 무력적 해결방식 내지는 본토 탈환을 의미하는 「反攻大陸」 정책을 포기하고 양안의 평화정착,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방식으로 수정하였다.<sup>42)</sup> 즉 중국은 양안의 평화적 협상을 일국양제 기본구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국가통일강령에서 제시한 통일의 원칙에서 ① 두개의 통치지역이 존재하는 양안의 현상황 인정과 평화정착, ② 양안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③ 평화통일 기반 조성등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 모두가 양안의 평화적 통일방식을 강

41)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국가내에서 다른 제도가 공존할 수는 있지만 두 개의 대등한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대만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의 분리를 촉진함으로써 통일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評臺灣「國家統一綱領」, 「人民日報」, 1991年 3月 18日.

42) 대만은 1991년 5월 헌법에 규정된 「비상시기(動員勸亂) 임시조항」을 철폐하였는데, 이는 대만이 중국공산당을 叛亂團體로 규정했던 기존의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 중국대륙을 통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상 통일방식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립요인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는 문제는 가장 큰 대립요인이다.

중국이 양안의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만에 대한 무력적 위협을 대만의 獨立 움직임을 牽制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최근 대만정부의 외교행태가 단순히 대외적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유엔가입 추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마저 포기할 경우 대만의 外交攻勢를 제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양안의 통일문제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중국의 대만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거나 대만이 중국의 一國兩制 통일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중국의 공식적인 무력사용 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각자의 통일정책에서 평화적 통일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무력사용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단계에서는 중·대만 모두가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내부적 요인들을 갖고 있다. 특히 대만은 자신들의 정치실체 인정과 함께 對대만 무력사용

포기를 양안간 三通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 나. 統一 推進段階

중국은 현단계에서 양안의 통일을 실현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대만과 같이 구체적인 추진단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중국은 “양안의 현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실현 이전에 相互尊重, 互補互利의 원칙에 따라 양안의 경제합작 및 각분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직접적인 通商·通航·通郵를 개방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sup>43)</sup>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우선 양안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교류·협력을 증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만이 양안의 공식적인 접촉, 교류·협력의 확대를 제약하고 있는 三不政策, 三通 不許 방침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44)</sup>

양안의 통일정책 추진단계에 대한 대만의 정책방향은 중국에 비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대만은 相互對等, 相互尊重, 相互受惠의 원칙하에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창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통일목표를 실현해 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현단계에서 통일을 위한 최종 협상에 이르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주요 정책방향을 명시

43) 「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人民日報」, 1993年 9月 1日.

44) 江澤民,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拔奪取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勝利,” 「人民日報」, 1992年 10月 12日 참조.

하고 있다. 또한 下位段階에서 설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전제로 上位段階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은 양안의 삼통 문제를 2단계의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1단계에서 중국이 대만의 정치실체를 인정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는 조건하에서만 양안의 三統을 허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제2단계에서는 양안의 대등한 공식적인 접촉창구 확립, 고위 지도자의 상호방문, 대만의 국제조직 참여·활동 보장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실현되어야만 제3단계에서 統一協商機構를 설립하고 統一大業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은 중국의 통일이 양안의 교류·협력 확대, 공식적인 접촉 및 지도자의 상호방문, 통일협상 등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계설정 및 각 단계의 정책 목표·조건 등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 다. 統一中國의 未來像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통일목표는 명실상부한 하나의 중국 건설을 통해 국가의 主權을 守護하고 領土를 保存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의 목표는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일국양제하에서 양안의 상호협력, 互補互利, 경제발전 등을 통해 中華民族의 振興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는 곧 양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설정하에 하나의 중국을 건설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동시에 두 가지 제도의 공존을 통해 민족의 공동번영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만의 통일목표는 대륙을 포함한 중국전역에서의 정치민주화, 경제자유화, 사회적 다원화 실현을 통해 민주·자유·균부에 바탕을 둔 하나의 통일된 중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은 모두가 통일된 하나의 중국건설을 통해 민족의 번영을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민족의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및 統一中國의 政治·經濟體制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은 통일 이후 대륙의 현사회주의체제와 대만의 자본주의 체제가 主從의 관계로서 공존하고, 민족번영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에 대만은 상호대등한 一國兩區體制하에서 자신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 경험과 성과를 대륙에 전파함으로써 양안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國家의 富強, 民族의 富裕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표 1〉 中國과 臺灣의 統一政策 비교표

|                  | 中國(一國兩制)  | 臺灣(一國兩制)   |
|------------------|---|--|
| 제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四個現代化 추진을 위한 대내외정책 전환</li> <li>○ 대만과의 관계재정립 필요성 인식</li> <li>○ 홍콩·마카오 반화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문제에 대한 현실적·체계적 접근 필요성 인식</li> <li>○ 양안관계 및 주변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한 통일방안 강구</li> <li>○ 중국의 一國兩制 통일방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li> </ul>   |
| 기구본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中國(一個中國)</li> <li>○ 두제도의 공존(兩制共存)</li> <li>○ 고도의 자치권 부여(高度自治)</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대신 '대륙과 대만은 모두가 중국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li> <li>○ 主從, 中央·地方의 불균형적 혹은 地域의 공존을 주장</li> <li>○ 중국이 제시하는 「特別行政區」 개념을 거부</li> </ul>  |
| 통추단<br>일진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안의 적대관계 청산, 교류·협력 확대, 三不政策 철회, 三通개방을 통해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협상을 추진함.</li> <li>○ 통일정책 추진의 구체적인 단계를 설정하지 않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대등,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함.</li> <li>○ 현단계에서 통일협상에 이르는 과정을 交流互惠段階, 相互信賴合作段階, 統一協商段階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의 주요 정책 방향을 명시함.</li> <li>○ 下位段階에서 설정한 정책목표의 실현을 上位段階진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함.</li> </ul> |
| 統一<br>中國의<br>미래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一國兩制하에 양안의 상호협력, 互補互利, 경제발전을 통해 중화민족의 진흥을 도모함.</li> <li>○ 兩岸이 中央政府, 地方政府의 관계하에서 하나의 중국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主權과 領土를 수호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실현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륙을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 정치민주화, 경제자유화, 사회적 다원화를 통해 民主·自由·均富의 통일된 중국을 건설함.</li> </ul>   |

## 第Ⅳ章 中·臺灣의 統一政策 推進機構

과거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통일정책을 전담하는 체계화된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비록 중국공산당과 국민당내에 고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통일정책관련 기구가 있었다고 해도 구체적인 組織·運營體系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양안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을 최고수뇌부의 독점적인 소관사항으로 제한하여 왔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개인적인 입장이나 주장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봉쇄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양안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쌍방의 통일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중국과 대만은 양안관련 업무 처리 및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안관련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의 여론을 일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양안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던 비공개·비상설 기구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등 통일정책관련 조직을 확대·강화하였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기구로는 중국의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海峽兩岸關係協會와 대만의 國家統一委員會, 行政院 大陸委員會, 海峽交流基金會가 있다.

## 1. 中國의 統一政策 推進機構

### 가.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중국의 대만정책, 통일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관이다. 또한 對臺工作領導小組는 공개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공식적인 당조직이라기 보다는 대만정책, 통일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지도부내의 協議體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양안관계 관련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기관이다.

對臺工作領導小組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의 統一戰線部, 국무원의 대만사무관공실, 외교부의 대만사무관공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臺灣關係司, 반관기구인 해협양안관계협회 등 양안관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국무원산하 조직 및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臺灣研究所와 臺灣民主自治同盟,<sup>45)</sup> 臺灣研究會는 각종 관련단체의 정책건의에 기초하여 양안

45) 「臺灣民主自治同盟」(臺盟)은 중국의 8개 民主黨派중 유일하게 대만출신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대만민주자치동맹은 1947년 2월 28일 臺北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중봉기인 「2. 28사건」을 배경으로 조직되었다. 中日戰爭 이후 국민당 정부는 대만에서 工業·鑛業의 80%, 土地의 70%, 建物의 30%, 金融機關의 93%를 접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만주민들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2월 27일 대북시내에서 경찰과 시민의 마찰이 발생하였고 2월 28일부터 臺北은 물론 臺中, 高雄 등 대도시에서 대규모 罷業, 撤市, 示威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대만 주민들이 희생되었다. 「2. 28사건」 당시 민중봉기를 주도했던 謝雪紅, 蔡鐵城, 周明 등은 홍콩에 망명하여 대만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대만민주자치 동맹을 창립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俞雲波, 吳雲鄉, 趙壽龍, 「中國民主黨派史略述」(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9), pp 300~311.

교류·협력 및 통일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10월 건국 이후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대만문제를 담당하는 小組를 운영하여 왔으며 毛澤東, 周恩來의 직접 관장하에 중공중앙의 統一戰線部, 調查部, 中央軍事委員會의 주요 책임자가 참여하였다. 毛澤東시기의 對臺工作領導小組는 주로 「臺灣解放」을 위한 군사·전략적인 측면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鄧小平體制가 출범한 이후 1979년 12월 鄧穎超와 廖承志가 中共中央 對臺工作領導小組 組長, 副組長을 겸직하면서 조직을 강화하고 기능을 다양화하였다. 또한 1987년 이후 楊尙昆과 吳學謙이 조장, 부조장을 각각 담당하여 왔으며, 1993년 3월 제8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楊尙昆이 국가주석직을 퇴임하면서 江澤民 총서기가 中共中央 對臺工作領導小組 조장을 담당하고 있다.<sup>46)</sup> 1994년 4월 현재 중국의 中共中央 對臺工作領導小組 인적 구성은 <표 2>와 같다.

46) 중국은 1994년 1월 이후 인사개편을 통해 대대공작영도소조의 組織·業務를 강화하였는데, 주요 배경으로는 1993년말 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만의 적극적 인 외교공세를 억제할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대만은 李登輝 總統, 連戰 行政院長 등 고위 지도부가 개인적인 휴가를 명분으로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하여 그곳 지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회담을 가졌다. 중국은 대만의 이러한 외교공세를 휴가를 구실로 한 「度假外交」, 「南進政策」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대만의 편법적인 외교활동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余兆吉, “海峽兩岸將展開高層談判,” 「廣角鏡月刊」, 1994年 2月號, pp. 6~8 참조.

## 〈丑 2〉 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 주요 구성원

| 姓 名   | 現 職  | 小組內 職責 |
|-------|--|--------|
| 江 澤 民 | 國家主席<br>中共中央 總書記<br>中共中央軍事委 主席   | 組長     |
| 錢 其 琛 | 國務院 副總理 外交部 部長<br>中共中央外事領導小組 副組長   | 副組長    |
| 王 兆 國 | 全國人民政協 副主席 召<br>「祖國統一委員會」主任<br>中共中央統一戰線部長<br>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主任<br>中共中央 臺灣工作辦公室 主任 | 秘書長    |
| 賈 春 旺 | 國家安全部 部長   | 小組委員   |
| 熊 光 楷 | 中共中央軍事委 總參謀長 補佐官   | 小組委員   |
| 汪 道 涵 | 「海協會」會長<br>上海市政府 顧問<br>北京大, 復旦大 教授   | 小組委員   |

출처: “中央對臺小組改組,” 「文匯報」(홍콩), 1993年 7月 3日;

“王兆國談對臺工作,” 「文匯報」, 1994年 1月 15日;

陳德昇, “中共對臺工作組織與人事分析,” 「中國大陸研究」,  
第37卷 第5期 (1994. 5), pp. 20~23 참조.

## 나.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

中共中央 對臺工作領導小組가 중국의 대만정책, 통일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기관이라면 국무원의 대만사무판공실은 對臺工作領導小組의 지침을 받아 대만정책, 통일정책과 관련된 각부처의 업무를 조율하고 각종 정책의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이 설립되기 이전 양안관계와 관련된 실무는 중공중앙 대만판공실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1987년 11월 이후 시작된 대만주민의 대륙내 친척방문을 계기로 양안의 교류·협력이 급격히 확대되자 당조직인 중공중앙 대만판공실의 업무체계를 가지고는 가증되는 양안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1988년 8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을 설립하였다. 또한 조직의 중첩을 피하고 업무의 효율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1991년 이후 중공중앙 대만판공실의 업무를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에 이관함으로써 두개 조직을 합병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무원내 조직을 확대·개편하였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이 설립 초기에 역점을 두었던 주요 사항은 양안의 교류·협력 증대를 통한 쌍방의 이해·신뢰구축과 공감대 형성, 양안의 경제무역·문화·체육·과학기술교류 등 소위 「四流」를 촉진하는 것이었다.<sup>47)</sup> 또한 이를 위해 秘書行

47) “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主任丁關根談對臺工作,” 「新華月報」, 總552期 (1989年 2月), p. 52.

政組, 政策研究組, 交流聯絡組, 人的交流組, 經濟貿易·科學技術組의 5개 조직을 운영하였다.

현재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이 제정한 방침·정책에 의거하여 국무원 각부처와 省·自治區·直轄市 人民政府의 양안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한다.

둘째, 국무원 관련부처와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對臺工作 방침·정책 추진 상황을 감독하며, 이들 하부기관이 국무원에 의뢰한 양안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양안관계와 관련된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하여 중공중앙과 국무원에 보고하는 동시에 관련부처에 통보한다.

넷째, 對臺工作 추진중에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분석하고, 관련부처에 대해 대대공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政策·法規·建議를 제기하도록 한다.

다섯째, 대만과의 경제합작, 건설·개발 프로젝트, 대만의 자본·기술·시장 활용문제를 총괄적으로 지도하며 관련부처의 양안간 교류·과학기술·문화·체육교류를 지원한다.

여섯째, 대만내 유력인사의 방중시 관련부처와 함께 접대업무를 수행한다.

일곱째, 對臺工作·事務와 관련된 對外弘報를 담당한다.

여덟째, 중공중앙, 국무원 최고지도부의 의뢰사항을 대행한다.<sup>48)</sup>

48) 陳德昇, “中共對臺工作組織與人事分析,” 「中國大陸研究」, 第37卷 第5期 (1994年 5月), pp. 25~25 참조.

한편,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의 인적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1988년 8월 설립 당시 초대 주임은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이던 丁關根이 담당했으며 陳宗臯, 孫曉邦이 각각 부주임을 담당했다. 또한 기타 구성원은 중공중앙 대만관공실 및 외교, 군사, 경제무역관련 부처의 인원으로 충당되었다. 1990년 11월 이후 丁關根이 중공중앙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福建省長이던 王兆國이 제2대 국무원 대만관공실 주임을 맡았으며 외교부 대만관공실 주임 唐樹備, 福建省 당위원회 통일전선부장 張克輝, 黑龍江省 부성장 陳雲林이 각각 부주임을 담당했다.<sup>49)</sup>

1994년 이후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은 국무원의 部級 기관으로서 주임은 王兆國이며, 부주임은 陳雲林(常務 副主任), 唐樹備, 孫曉邦, 李慶州 등이 부주임을 담당하고 있다. 대만사무관공실의 구체적인 조직체계와 인적 구성은 <표 3>과 같다.

49)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 1988年 第26號, p. 862; 1990年 第30號, p. 1151 참조.

〈표 3〉 國務院 臺灣辦公室 組織 機能 人的 構成

| 內 部 組 織  | 주 요 기 능                             | 책 임 자 |
|----------|-------------------------------------|-------|
| 秘 書 局    | 조직내의 일반 사무                          | 王 富 卿 |
| 聯 絡 國    | 대만 유력인사 접대 및 統一戰線                   | 王 永 海 |
| 統 合 局    | 대만 「海基會」와의 교섭업무 처리                  | 趙 哲 開 |
| 交 流 局    | 양안간 交流活動의 按配 및 審査                   | 張 金 成 |
| 交 往 局    | 대만인들의 대륙내 경제·무역활동 및 관광중에 파생된 문제의 처리 | 楊 柏 森 |
| 新 聞 局    | 대만에 대한 弘報 및 대만기자의 大陸取材 허용 審査        | 張 銘 清 |
| 經濟·科學技術局 | 양안의 경제무역정책 및 과학기술합작관련 사무 처리         | 劉 震 濤 |
| 研 究 局    | 對臺灣政策 수립, 대만내부 情勢分析                 | 邢 魁 山 |

출처: “海協會機構人事變動,” 「文匯報」(홍콩), 1994年 1月 14日;  
 “陳雲林爲臺辦副主任,” 「文匯報」(홍콩), 1994年 2月 17日.

#### 다. 海峽兩岸關係協會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로 약칭)는 1990년 11월 대만이 설립한 반관반민의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로 약칭)의 교섭상대로서 설립된 조직이다. 대만이 海基會를 설립한 초기 중국은 대만의 해기회 설립목적이 한편으로 「三不政策」을 고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반관반민의 중재기구를 통해 양안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중국

은 대만정부가 중국이 요구하는 黨對黨 담판 등 정식의 양안 간 협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海基會를 설립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이 三不政策을 철회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지나치게 강요하기 보다는 우선 준정부기구간의 접촉을 통해 양안의 공식적인 협상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즉 中共中央은 1991년 3호문건을 통하여 “대만이 설립한 준정부 차원의 중재기구와 접촉하여 三通의 촉진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sup>50)</sup>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1991년 6월 7일 중국 국무원 臺灣事務辦公室는 담화문을 통하여 “해협양안의 관련 부처와 권한을 위임받은 團體 및 人士는 조속한 시일내에 양안의 삼통과 교류확대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sup>51)</sup>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만의 海基會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이러한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결국 중국은 대만의 海基會 설립 이후 1년여가 지난 1991년 12월 26일 社會法人 형식의 海協會를 설립을 선포하였다.

海協會의 주요 기능은 중국이 海協會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이 三不政策을 고수하고 있는

50) 「中共中央關於進一步加強對臺工作的通知」, 1991年 3號文件 (1991年 1月 22日), 陳德昇, “中共對臺工作組織與人事分析,” p. 27에서 再引用.

51)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新聞局編, 「兩岸關係與和平統一」(北京: 華藝出版社, 1992), p. 31.

상황에서 대만측 海基會와의 접촉을 통하여 양안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문제를 협의하는 동시에 양안의 삼통 및 정부차원의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海協會 章程에 따르면 海協會는 1인의 회장과 상무부회장, 부회장 약간 명, 비서장, 초빙 고문 등으로 구성되며 하부조직으로 연락부, 경제부, 연구부 등 6개부를 두고 있다.<sup>52)</sup> 海協會의 조직체계와 인적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海協會의 組織과 人的 構成

| 職       | 位 | 姓 名                       |
|---------|---|---------------------------|
| 會       | 長 | 汪道涵                       |
| 顧       | 問 | 經叔平, 鄭鴻業, 張克輝, 林麗(瑤), 蔡子民 |
| 副 會     | 長 | 唐樹備(常務副會長), 鄒哲開           |
| 秘 書     | 長 | 鄒哲開                       |
| 專 門 委 員 |   | 許家現, 陳丹特, 袁小凡, 徐志勤        |
| 副 秘 書 長 |   | 劉剛奇, 趙正豫, 孫亞夫, 李亞飛        |
| 秘 書 部 長 |   | 喬 鋒                       |
| 研 究 部 長 |   | 李亞飛                       |
| 聯 絡 部 長 |   | 王小兵                       |
| 協 調 部 長 |   | 陳建德                       |
| 綜 合 部 長 |   | 周 寧                       |
| 經 濟 部 長 |   | 岳 軍                       |

52) “海峽兩岸關係協會章程,” 「大公報」(홍콩), 1991년 12월 17日.

## 2. 臺灣의 統一政策 推進機構

### 가. 國家統一委員會

蔣經國 사후 총통직을 승계한 李登輝 대만총통은 1990년 5월에 있었던 제2기 취임연설에서 憲法에 명시된 비상시기 임시조항을 향후 1년내에 철회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대륙정책, 통일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조직의 확대·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만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양안관계의 현실적 변화를 직시하고 각종 현안의 처리과정에서 보다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양안의 통일과 관련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李登輝 총통의 이러한 정책구상을 바탕으로 대만은 “朝野 각계 지도자들의 정기적인 集會를 통하여 국가통일사업의 大政方針을 논의하고 자문을 구한다”<sup>53)</sup> 취지하에 총통부직속의 국가통일위원회를 설립하였다(1990. 9). 국가통일위원회는 설립취지에서도 나타나 바와 같이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라기 보다는 최고지도부가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 각종 지도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문기관이다. 그러나 그 형식적인 지위와는 관계없이 대륙위원회는 대만의 대륙정책, 통일정책 결정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

53) 黃昆輝, “國家統一綱領的要旨與內涵,” 「中國大陸研究」, 第34卷 第12期 (1991年 12月), pp. 5~9.

러한 기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대공작영도소조의 기능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이 국가통일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발표한 「國家統一委員會設置要點」(1990. 9)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통일위원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통일위원회 인적 구성은 總統이 겸직하는 주임, 부총통, 행정원장, 총통의 초빙 인사 등 3명의 부주임과 총통이 각계에서 초빙한 25~31명의 위원, 역시 총통이 초빙한 약간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가통일위원회는 매 2개월마다 定期會議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sup>54)</sup>

#### 나. 行政院 大陸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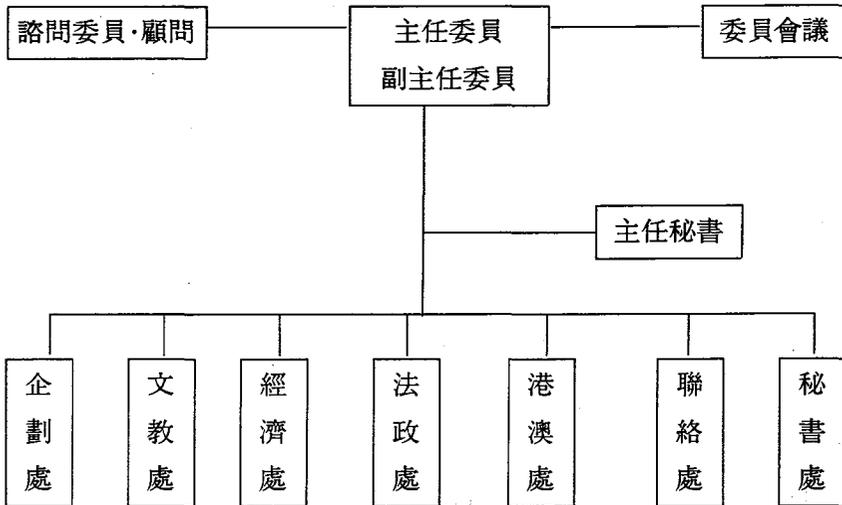
대만의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만의 대륙정책, 통일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최고 실무기관이다. 또한 국가통일위원회가 총통부내의 자문기관이라면 대륙위원회는 臺灣立法院의 「行政院大陸委員會組織條例」(1991. 1. 18 통과)에 따라 1991년 1월 28일 설립된 공식적인 정부기관이다.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주요 간부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3명), 위원(17~27명), 연구위원(6~14명), 전문위원(7~11명) 主任秘書(1명)로 구성되며, 그 밖에 企劃處, 文教處, 經濟處,

54) 馬英九, 「兩岸關係的回顧與前瞻」(臺北: 行政院大陸委員會, 1992), 부록 2, 「國家統一委員會設置要點」 참조.

法政處, 港澳處, 聯絡處, 秘書處 등 7개처의 처장, 부처장, 과장 등이 주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조직과 7개처의 주요 업무는 <표 5>, <표 6>과 같다.

<표 5> 行政院 大陸委員會 組織圖表



출처 : 臺灣 國立編譯館, 「國家統一綱領與大陸政策」, pp. 24~25.

<표 6> 行政院 大陸委員會 7개처의 主要 業務

| 處 名 | 주요 업무   |
|-----|---|
| 企劃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륙정책의 연구 및 종합적인 계획수립</li> <li>○ 대륙내 情勢分析</li> <li>○ 해외 중국연구기관과의 접촉</li> <li>○ 중국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출판</li> <li>○ 양안의 資源利用·開發 계획</li> </ul> |

| 處名  | 주요업무   |
|-----|--|
| 文教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안의 학술·문화·교육·체육·언론교류의 심의</li> <li>○ 대륙정책중 文教와 관련된 정책 추진</li> </ul>                            |
| 經濟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안의 재무·금융·경제무역·교통·농림수산업·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교류 추진</li> <li>○ 대륙정책중 경제관련 정책 추진</li> </ul>              |
| 法政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안의 法務·內政·衛生 및 勞務관련 업무 추진</li> <li>○ 양안의 인적 교류와 관련된 법규의 제정·심의</li> <li>○ 대륙의 法制 연구</li> </ul> |
| 港澳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對香港·마카오정책의 계획·수립</li> <li>○ 홍콩·마카오와 관련된 업무 추진</li> <li>○ 홍콩·마카오주민들과의 연계 및 지원정책 추진</li> </ul>  |
| 聯絡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륙정책의 弘報</li> <li>○ 해외에 거주하는 대륙주민·단체들과의 연계 추진</li> <li>○ 대륙관련 업무의 연락 담당</li> </ul>            |
| 秘書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議事日程 및 사무관리 담당</li> <li>○ 각종 문서, 인사관리</li> </ul>  |

출처 : 馬英九, 「兩岸關係的回顧與前瞻」(臺北 : 行政院大陸委員會, 1992), pp. 81~87, 부록 3, 「行政院大陸委員會組織條例」.

#### 다. 海峽交流基金會

대만의 海基會는 대만정부가 중국과의 공식적인 협상을 거부하는 三不政策을 계속 고수하면서 양안간 교류·협력 확대에서 파생한 각종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妙策으로 1990년 11월 설립한 기구다.

海基會는 설립에 관한 組織章程에서도 명시했듯이 양안주민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非營利 財團法人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海基會는 형식적으로는 민간조직의 성격을 띠지만 실제로는 행정원 대륙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만 정부를 대신하여 중국측 海協會의 협상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양안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55)</sup>

海基會의 주요 업무는 ① 양안주민의 상호방문과 관련된 서류의 접수·심사 및 관련서류의 발급, ②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의 심사, 신분관계 증명 및 소송서류의 送達, 양안간 범 죄인 인도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 ③ 중국내 경제무역관련 정보 수집·배포, 양안의 간접무역·투자상의 분규 해결 협조, ④ 양안주민의 문화교류 지원, ⑤ 대만주민의 중국내 체류기간중 합법적인 권익 보장 지원, ⑥ 양안의 인적 교류에 관한 자문, ⑦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등이다.<sup>5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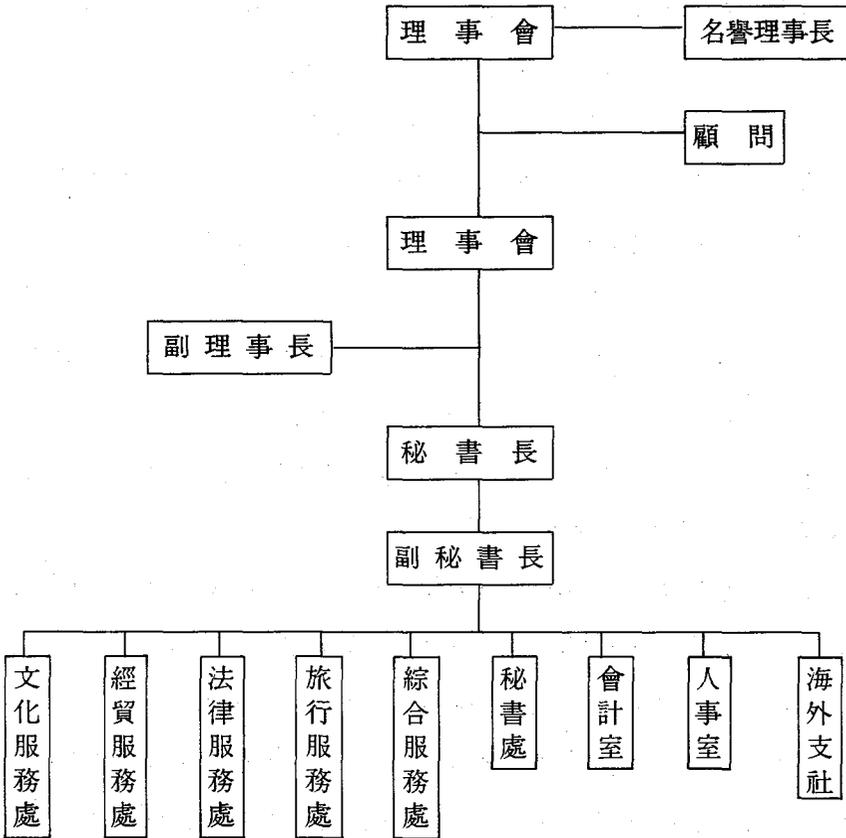
한편 海基會는 財團法人이라는 성격때문에 중요한 정책결정은 理事會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1~2명), 이사(43명)로 구성되며 해기회 기금의 운용, 비서장의 任免, 주요 정책방침 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 주요 실무는 비서처, 종합복무처, 여행복무처,

55) 行政院 大陸委員會와 海基會간의 委任, 授權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陸委會 正式授權海基會,” 「中央日報」(대만), 1993년 4월 5일 참조.

56) 馬英九, 「兩岸關係的回顧與前瞻」 부록4, 「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捐助組織章程」 참조.

법률복무처, 경제무역복무처, 문화복무처 등 6개처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海基會의 조직체계는 <표 7>과 같다.

<표 7> 海峽交流基金會 組織圖表



출처 : 國立編譯館, 「國家統一綱領與大陸政策」, p. 26.

## 第 V 章 中·臺灣의 統一實現을 위한 課題

중국과 대만이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양안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중국과 대만이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양안의 통일문제를 「解放」, 「收復」의 개념이 아닌 平和的·理性的 統合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양안의 통일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대내외적 統一基盤 造成을 위한 중국과 대만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중에서도 양안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쌍방의 참여한 대립 해소, 양안의 평화정착, 쌍방의 정치·경제적 안정 유지 등 對內的인 課題와 홍콩반환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등 對外的 統一基盤 造成을 위한 쌍방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 1. 政治的 關係設定에 대한 合意

#### 가.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합의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두개의 중국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

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은 자신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라는 관점에 기초한 것인 반면, 대만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은 대륙의 중국공산당정권과 중국을 구분한 전제하에 자신들이 1912년에 건국한 中華民國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이다.<sup>57)</sup>

이처럼 중국과 대만은 중국이 「하나」라는 원칙에서는 일치하지만, 각자가 「중국」에 부여하는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대만의 입장차이는 자연히 통일정책 및 통일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게 된다. 즉 중국은 현재 중국공산당정권이 지향하는 사회주의정치·경제체제를 주축으로 하고 대만의 현 정치·경제체제를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통일을 추구하는 반면, 대만은 中華民國의 이념을 계승한 민주·자유·균부의 통일중국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만의 통일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은 하나라는 원칙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중국」에 부여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쌍방의 공감대를 모색해야 한다.

---

57) 즉 대만이 지칭하는 중국은 1949년 이전의 중국과 미래의 통일된 중국을 의미한다. 鄭中樞, “論臺海兩岸的關係,” 「中國大陸研究」, 第37卷 第1期 (1994年 1月), pp. 6~7 참조.

## 나. 「兩制」와 「兩區」의 절충

중국이 추구하는 일국양제 통일방식의 핵심은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중앙정부, 지방정부차원에서 두가지 제도(兩制)의 공존을 통한 양안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하되 중앙·지방정부차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통치권을 갖는 대등한 두개 지역(兩區)의 공존을 통해 양안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兩制와 兩區에 대한 중·대만의 첨예한 대립은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적인 장애 요인이다.

과거 국민당의 절대적인 통치하의 대만은 중화민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합법적인 정부이며 중국공산당은 잠정적으로 대륙을 점령하고 있는 叛亂團體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漢賊不兩立」 원칙을 고수해 왔다. 대만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공산당정권의 정치적 실체와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이러한 경직된 태도와 정책방향은 오히려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점점 설득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李登輝집권하의 대만은 1949년 이후 중국공산당정권이 중국대륙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중화민국이 대만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독립적인 정치실체라는 점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즉 대만은 중국과 대만이 유일·합법정부에 대한 我執과 偏見을

버리고 배태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대등한 정치실체로서의 상대방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58)</sup> 또한 대만은 이러한 정책전환을 자신들이 대륙정책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며,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59)</sup>

양안의 정치적 관계를 一國兩區, 혹은 一國兩府로서 확립하고자 하는 대만의 정책은 1988년 당시 대만의 외교부장으로 서 彈性外交 필요성을 역설한 대표적인 인물인 連戰이 1993년 3월 1일 行政院長으로 취임하면서 더욱 적극성을 띠었다. 즉 대만은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관계강화 움직임,<sup>60)</sup> 유엔 재가입 추진,<sup>61)</sup> 아프리카·중남미 일부 국가들과의 수교 추진 등

58) “李登輝總統記者會有關大陸政策部分,” 「大陸工作手冊」(第一卷), pp. 壹-19 ~ 壹-20.

59) 鄭中樞, “論臺海兩岸的關係,” pp. 6~7.

60) 1993년 5월 티베트 망명정부의 각료들이 대만을 방문한 바 있으며, 李登輝 총통은 5월 20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달라이 라마가 대만방문을 원한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티베트 망명정부는 대만정부가 티베트의 自決權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건하에서 달라이 라마의 대만방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Hamish McDonald, “The Tibetan Connection: Taipei finds an ally in the Dalai Lam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0, 1993, p. 12; Lincoln Kaye, “Raging Inflation: Lhasa price protests escalate into anti-Chinese rio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p. 13 참조.

61) 李登輝 총통은 1993년 4월 9일 國民大會에서의 연설을 통해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가입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등위는 1993년 5월 20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대만의 유엔가입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결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自信心을 가져야 한다” 라고 역설했다. “「中華民國參與聯合國」說明書,” 「中央日報」, 1993년 5월

탄성외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이러한 적극적인 外交攻勢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지극히 부정적이다.<sup>62)</sup> 특히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여 궁극적으로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외교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를 도저히 默過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은 물론 관련 국가들이 중국의 입장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외교단절 등의 강경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63)</sup>

대만의 정치적 실체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첨예한 대립은 1994년 7월 5일 대만행정원 대륙위원회가 대륙정책과 관련된 「臺海兩岸關係說明書」를 발표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서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 고수, 一中一臺의 반대 등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19日; 施若彬, “臺灣重返聯合國的實際行動,” 「爭鳴」, 1993年 6月號, pp. 87~88; Julian Baum, “Virtual Reality: Moves to rejoin UN, recognize Mongoli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p. 15 참조.

62) 그 동안 중국은 대만의 탄성외교에 대해 “하나의 국가내에 대등한 지위를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두개 존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대만의 실질적인 의도는 두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조장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江澤民對李登輝就職典禮致詞之回應,” 「新華月報」, 1990年 10月號; “楊尙昆會見中國時報記者時的談話內容,” 「人民日報」, 1990年 11月 10日 참조.

63) 대만의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엔은 主權國들의 조직으로서 중국의 일부분인 대만은 가입자격이 없다. ②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一中一臺」를 조장하여 중국의 분열상태를 장기화하려는 것이다. ③ 이는 中華民族의 근본이익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대만동포를 포함한 中國人民 모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다. 「人民日報」, 1993年 4月 30日.

대만이 두개의 대등한 실체로서 국제사회에 공동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64)</sup>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이 표면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만문제의 유래와 양안관계의 현실을 왜곡시킴으로써 중국의 주권 및 통일대업을 음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sup>65)</sup>

이처럼 정치적 실체 확보 및 국제적 지위 강화를 통해 양안관계를 대등한 정부, 통치지역 차원으로 확립하려는 대만정부의 노력은 중국의 초강경 반대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자신도 국제적인 여론의 환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우선 중국의 반발은 대만이 정치적 실체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統一白書」에서도 밝혔듯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兩岸關係를 규정하는 鐵則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이러한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밖에 대만의 정치적 실체 확보 노력에 대한 國際的인 支持 역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미국과 주요 서방국들의 對대만정책이 다소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對中關係 불변

64) 또한 「兩岸關係說明書」는 ① 中國이 대륙과 대만으로 분열된 根源과 本質, ② 양안관계의 변화추이, ③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對內外的 要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中國時報」, 1994年 7月 6日 참조.

65)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 대변인은 “중국의 主權과 領土는 결코 분열될 수 없으며, 두개의 대등한 정치적 실체를 확립하는 것이 중국의 통일에 유리하다는 대만의 주장은 「兩個中國」, 「一中一臺」를 조장함으로써 양안의 통일을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人民日報」, 1994年 7月 13日.

을 기본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만이 의도하는 정책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sup>66)</sup> 따라서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과 관련하여 「兩制」, 「兩區」에 대한 중·대만의 참여한 대립이 지속되는 한, 양안의 통일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 2. 三通을 통한 交流·協力 擴大

양안간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양안의 전면적인三通 실현여부와 직결된 문제다. 즉 대만정부가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을 완화하여 중국과의 직접적인 삼통을 추진할 경우 양안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교류·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양안의 삼통은 양안관계 및 통일논의의 진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다.

현재 중·대만은 쌍방의 교류·협력이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도 전면적인 三통에 관해서는 근원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양안의 교류·협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의 삼통을 불허하는 대만의 정책은 그 실효성보다는 다분

66) 미국의 對대만정책의 한계는 19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도 잘 나타났다. 즉 대만은 APEC회원으로서 정상회담에 李登輝의 참가를 희망했고, 미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결국 중국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Julian Baum, "Seatless in Seattle: Compromise on APEC summit leaves Taipei unsatisfied,"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7, 1993, p. 20.

히 政治的·象徴的인 意味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三通을 지칭하는 通商·通郵·通航중에서 양안의 通商은 대만정부의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양안의 通郵문제도 1993년 4월의 「汪辜會談」에서 이루어진 「양안 등기 우편물 조회와 유실물 보상 협의」가 발효된 이후 대만정부의 제한조치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양안간 교류·협력의 진일보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양안의 通航과 관련된 문제이다. 중국은 양안의 通商, 通郵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었다는 판단하에 양안의 通航 실현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만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양안의 通航문제와 관련하여 1993년 4월 19일 「海峽兩岸航運交流協會籌備處」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왔다.<sup>67)</sup>

이처럼 중국은 양안의 통항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대만은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대만은 「國家統一綱領」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67) 중국이 강구하고 있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원 臺灣事務辦公室, 交通部, 口岸(港灣)관공실, 公安部, 海關總署(關稅廳) 등의 관련자들로 구성된 「兩岸海上直航考察組」를 조직하였다. 둘째, 上海市, 福建省, 廣東省 등의 省級 대만사무관공실에 양안의 직항로 개설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셋째, 港灣, 港口의 시설확장과 관련하여 ① 福建省의 福州, 廈門, 泉州, 東山, 湄州灣의 島嶼에 12개소의 선박 정박지를 지정하여 海上直航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 ② 廈門의 高崎 국제공항의 확장, 長樂 국제공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黃昆輝, “中共急於三通, 研擬兩岸直航方案,” 「中央日報」, 1993년 5월 8일.

와 같이 양안의 三通을 통일정책 추진의 제2단계로 설정하고, 중국이 대만의 정치적 실체, 국제적 지위, 무력사용 포기, 대만의 각종 법률을 승인하는 조건하에서만 양안의 통항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sup>68)</sup> 따라서 대만이 條件附 通航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한 양안의 통항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만이 통항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다소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대만정부는 통항과 관련된 중국의 각종 요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만내의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sup>69)</sup> 또한

68) 또한 대만은 중국이 三通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면에는 ① 三通을 구실로 국가통일강령에서 설정한 통일정책 추진단계의 혼선을 야기하고, ② 민간차원의 교류를 정부차원의 교류로 확대하고(以民逼官), ③ 三通을 통해 통일을 촉구하려는(以通促統)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69) 양안의 통항에 대한 대만내의 여론은 대략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현재의 間接的인 通航을 계속 固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論旨은 ① 중국은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政治的인 動機에서 양안의 직항을 주장하고 있다. ② 현재 중국의 각종 조치, 항만설비 등은 양안의 직항을 수용할 능력이 없다. ③ 현재의 상황에서는 직항을 위해 필요한 쌍방의 合意·諒解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둘째, 條件附 直航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대만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나 條件의 範圍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無條件 直航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국과의 貿易·投資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중에서도 두번째의 의견이 비교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만내에서는 조건부 직항을 추진하되 조건의 범위를 융통성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양안의 통항에 대한 대만주민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國立編譯館, 「國家統一綱領與大陸政策」, p. 133, 〈표 7〉 「民衆對臺灣與大陸直接通航的看法」; 대만행정원 대륙위원회(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역), 「중·대만간 직항문제와 전망」(원제목은 '兩岸直航的問題與展望'), p.64~65, 〈부록 4〉 「17차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양안간 직항'에 대한 대만주민의 입장」 참조.

중·대만은 1993년 5월 25~26일 양일간 上海에서 쌍방의 항공·운수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안 민항·운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양안의 통항과 관련된 많은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양안의 직항을 위한 항공기의 國籍標識, 航路, 비행 정보구역, 항공관제선, 통관절차 등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였으나, 직항 실현 이전에 우선 대만측에 부정기 전세기 취항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sup>70)</sup>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양안의 통항에 대한 중·대만의 대립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양안의 전면적인 통항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sup>71)</sup> 또한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여부는 비단 양안의 삼통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3. 海協會, 海基會의 협상기능 강화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교류·협력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70) 중·대만이 대만의 전세기 취항 등 편법적인 통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직항에 대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간접적인 통항의 수준을 제고한 이후 점진적으로 直航에 접근해 가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中共提臺灣包機不定期飛大陸方案,” 「中央日報」, 1993년 5월 28일.

71) 예를 들어 대만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 黃昆輝는 1994년 7월 5일 “兩岸의 직항은 아직까지 政治, 安全, 法律상의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선 기술적인 문제를 철저히 검토한 이후 직항에 관한 협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國時報」, 1994년 7월 6일.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이를 위한 쌍방의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즉 중·대만은 兩岸의 교류·협력이 민간 차원의 비공식적인 논의만으로는 더 이상 규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간에 정치적 성격을 갖는 쌍방의 接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半官半民의 성격을 띠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海協會, 海基會를 설립하였다.<sup>72)</sup>

앞으로도 대만정부가 중국과의 공식적인 接觸·談判·妥協을 거부하는 三不政策을 고수하는 한 양안의 당대당협상, 정부간 협상 등 공식적인 협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은 海協會와 海基會가 양안간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접촉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중재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양안관계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72) 海協會·海基會가 형식적으로는 민간기구의 성격을 띠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대만정부 내지는 최고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두협회의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 비중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중국의 海協會 회장인 汪道涵은 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1985년 上海市長을 퇴임할 때까지 경제부처의 요직을 담당했다. 또한 江澤民 총서기와는 上海交通大學의 동문이자 상해시의 개혁·개방정책을 주도해 온 동료로서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91년 海協會의 설립과 함께 회장으로 영입되었다. 한편 대만의 海基會 회장 辜振甫는 이등위 총통의 핵심 측근으로서 總統部 顧問, 국민당 中央常務委員이며 1991년부터 海基會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1993년 4월 27~28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汪辜會談」과 「廈門會談」(1993. 11. 8~13), 「臺北會談」(1993. 12.)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할 때 앞으로 중국과 대만이 海協會, 海基會의 역할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양안의 접촉창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해협회, 해기회의 役割과 權限을 보다 명확히 設定하여야 한다. 즉 海協會, 海基會의 역할을 순수한 민간차원의 양안교류·협력 확대에 국한시킬 경우 접촉과정에서 쌍방이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양안관계의 현실상 일부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기구의 성격, 역할에 대한 중·대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정치적인 현안의 해결 모색 중 어느 것에 있어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우선 「汪辜會談」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중국과 대만이 「汪辜會談」을 통해 양안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쌍방의 공식적인 접촉통로 확립이라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대만이 三不政策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록 비정치분야의 논의에 한정된 반관기구의 회담이긴 하지만 우선 대만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므로써 三不政策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반면, 대만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三不政策을 카드로 投資保障協定, 武力使用 拋棄 등과 관련된 중국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대만의

政治的 實體 확보를 위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汪辜會談」은 海協會와 海基會간 회담의 정례화 및 「양안 공증서 사용 사증 협의」(兩岸公證書使用查證協議), 「양안 등기 우편물 조회와 유실물 보상 협의」(兩岸掛號函件查詢補償事宜協議) 등 교류·협력 제도화를 위한 일부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투자보장협정, 삼통 등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sup>73)</sup>

그 밖에 「汪辜會談」에 이어 개최된 「廈門會談」, 「臺北會談」에서도 양안의 교류·협력 문제가 쌍방의 정치적인 입장과 맞물려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예를 들어 「廈門會談」에서는 1993년에 빈발한 중국 민간항공기 납치범 송환, 대만 해협에서의 어로분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쌍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결론을 얻지 못했다. 대만은 항공기 납치범 송환과 관련하여 법률초안의 성격을 갖는 文件을 가지고 중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형사범 송환과 관련된 법규를 명시한 「양안간 항공기 납치범 송환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중국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海協會가 작성한 「항공기 납치범 처리에 관한 의견」만을 제시하고 대만과 형사범 송환에 관한 정식의 협정체결을 거부했다.

73) 대만의 海基會 부회장 邱進益은 “성공도 실패도 아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표현으로 「汪辜會談」의 성과와 그 限界를 표현했다. 李怡, “專訪 邱進益談汪辜會談,” 「九十年代」(1993年 6月號), pp. 57~58.

또한 어로분규 처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대만은 어로분규 처리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기구의 법적인 지위 및 분규의 처리방식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sup>74)</sup>

항공기 납치범 송환, 대만해협에서의 어로분규 처리를 불문하고 중국과 대만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중국이 대만과의 각종 문제의 처리, 협정체결 과정에서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중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등한 정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sup>75)</sup> 즉 중국은 대만과의 각종 협상·협정을 국내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으나 대만은 양안간의 협상을 대등한 정부대 정부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74) 行政院 大陸委員會, 「漁事糾紛問題背景說明」(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3), 宋國誠, “一九九三年中共對臺政策與兩岸關係的評告,” 「中國大陸研究」, 第37卷 第2期(1994年 2月), pp. 54~55에서 재인용.

75) 다만 중국은 쌍방의 정치적 입장차이로 인한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대만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정부대 정부차원의 협정체결은 아니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관련법규를 공포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중국내 대만기업의 투자보호협정과 관련하여 “투자보호협정은 독립된 정부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안”(「人民日報」, 1992년 10월 16일)이라는 점을 들어 계속 거부해왔으나, 1994년 3월 5일 全人大 常務委員會는 「中華人民共和國臺灣同胞投資保護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방식은 대만을 독립된 정치실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대만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조치이며 대만으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中共審議通過臺胞投保法,” 「中國時報」, 1994년 3월 6일; 王銘義, “臺商投保法, 對兩岸互動的影響不容忽視,” 「中國時報」, 1994년 3월 7일.

쌍방이 특정 현안의 해결을 위한 관련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명문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海協會, 海基會의 실질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76)</sup>

결국 앞으로 海協會와 海基會가 양안교류·협력 촉진 및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중재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海協會, 海基會의 기능·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중·대만정부가 이들의 협상과정에 정치적인 의도를 지나치게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최근 대만내에서는 司法的 管轄權, 主權問題 등 양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海協會, 海基會의 실무적인 협상기능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즉 대만이 엄연히 갖고 있는 주권 및 사법적 관할권을 굳이 협의문건에 대한 중국측 대표의 署名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설혹 중국측 대표가 협의문건에 서명했다고 해서 과연 이를 중국이 대만의 주권 및 사법적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sup>77)</sup>

76) 「廈門會談」에 이어 열린 「臺北會談」에서도 중·대만의 첨예한 대립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쌍방의 자신들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중국은 대만이 항공기 납치범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했고, 대만은 양안의 각종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중국의 내정」(中國內部事務的原則) 원칙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77) 王銘義, “兩岸事務性談判應致力突破疆局邁向雙贏,” 「中國時報」, 1994年 1月 3日; 王銘義, “陸委會對兩岸會談戰略目標是什麼?” 「中國時報」, 1994年 1月 8日 참조.

#### 4. 平和定着

양안의 평화정착문제는 鄧小平체제 출범 이후 중국이 평화적 통일방식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안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다. 평화정착문제의 핵심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만정부는 중국에 대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계속 回避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만에 대한 무력적 위협을 대만의 獨立 움직임을 牽制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李登輝, 連戰을 중심으로 한 대만정부의 최근 외교행태가 단교국가와의 復交, 유엔가입 추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의 外交攻勢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중국의 대만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거나 대만이 중국의 一國兩制 통일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현상황에서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 선언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대만은 중국이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보장하고 무력사용을 포기하는 조건하에서만 중국과의 삼통허용 등 양안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兩岸關係 발전 및 통일문제가 본격적으로 논

의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양안의 평화정착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중국과 대만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 즉 중국과 대만은 기존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지만 쌍방의 입장을 상호절충하는 선에서 양안의 平和定着을 보다 공고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방안중에는 중국이 지도부의 聲明 혹은 決議文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형식을 통해 양안의 평화정착에 대해 융통성을 보이고 대만도 이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대만 공히 양안의 敵對關係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sup>78)</sup> 둘째,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감행할 경우 중국 역시 막대한 정치·경제적 損失과 混亂이 不可避하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은 홍콩의 정치개혁방안을 둘러싼 영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홍콩의 경제가 퇴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대만의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78) 대만은 1991년 5월 「動員勸亂時期」의 종식을 선언하고 1993년 8월 국민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黨憲改正을 통해 「對敵鬭爭工作」 등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중국과의 敵對關係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표명했다. 중국도 “양안의 적대관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汪道涵, “兩岸的敵對關係幾可稱爲已不存在,” 「中央日報」, 1993年 5月 30日.

셋째,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경우 중국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警戒心이 고조되고, 결과적으로 중국과 이들 국가의 관계발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日本, 美國 등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를 겨냥하여 「中國威脅論」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킬 경우 중국 스스로 중국위협론을 正當化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주변 국가들의 우려에 그치지 않고 美·佛·獨 등 주요 서방국가의 대만에 대한 武器販賣 구실을 제공하는 逆效果를 招來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서방국가들로부터 공군·해군력 증강을 위한 무기구입을 부단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79)</sup>

이처럼 양안의 평화 정착문제는 중·대만이 양안관계발전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 역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間接的·非公式的으로 무력사용 포기를 선언하거나 무력사용 포기에 條件을 附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보다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79) 汪道涵, “兩岸敵對關係幾可稱爲「已不存在」,” 「中央日報」(臺灣), 1993年 5月 30日; “李登輝總統의 CNN 기자회견,” 「中央日報」(臺灣), 1993年 3月 26日; 岳賽, “加入聯合國的奇想: 臺灣外交活動向觀察,” 「開放雜誌」(1993年 5月號), pp. 86~87.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양안의 평화정착문제는 여전히 양안관계 발전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5. 對外的 統一基盤 造成

중국은 시종일관 양안의 통일문제가 순수한 중국의 內政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은 양안의 통일문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협의에 의해 형성된 남북한문제, 동서독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차원에서 거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양안의 통일문제에 外勢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은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안의 統一問題를 순수한 중국의 내정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서방국들이 중·대만 모두와 다각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양안의 통일문제에는 대외적인 요인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양안의 統一過程에서는 중·대만 쌍방간의 노력 못지않게 대외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성을 갖는다.

### 가. 中·美關係의 안정적 유지

양안관계 발전 및 통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요인

중에서도 中·美關係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중·미 관계는 미국의 대만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1989년 6. 4 天安門事件 이후 중·미관계는 중국의 인권상황, 불공정 무역 관행, 제3국에 대한 핵기술 지원 및 무기수출에 대한 美國의 비난과 中國의 반발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sup>80)</sup> 또한 중·미간의 대립을 야기했던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양국관계 발전을 阻害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특히 양국관계가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던 1992년 9월 미국이 대만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를 결정하면서 중·미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양상마저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미관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해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중·미관계가 비록 과거 對蘇戰略 차원에서의 우호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신국제질서하에서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발전이 시도되고 있다. 중·미관계의 변화 움직임은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

80) 중·미관계는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1990년대 이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양국의 정책방향이 크게 전환되면서 과거의 밀월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즉 미국은 소련의 붕괴 이후 對中政策에서 중국에 대한 特惠를 축소하고 實利를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경우는 정치·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사회주의권 변화에 따른 「和平演變」의 위기감 때문에 미국의 각종 요구에 柔軟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했던 기존 懸案에 대한 양국의 태도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양국의 대립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즉 중국은 人權狀況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여전히 內政干渉으로 인식하면서도 6. 4 천안문 사건 主動者의 일부 석방 등 부분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政治犯의 전원 석방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태도를 자제하고 있다. 중·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통상마찰 역시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대중국 貿易赤字가 深化되면서 수입관세 인하, 수입할당제 철폐, 무역관계법 개선 등 중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여 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중국은 최혜국대우 연장, GATT 가입 등과 관련된 미국의 지지를 의식하여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양국간 통상마찰 타개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sup>81)</sup> 미국도 중국이 개혁·개방 확대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익에 이롭지 못하다는 전략적 고려와 미국의

81) 1993년도 중국의 대미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Wei Zhengyan, "China's Diplomacy in 1993," *Beijing Review*, January 17-24, 1994, pp. 10-15; David Bachman, "China in 1993: Dissolution, Frenzy, and/or Breakthrough?" *Asian Survey*, vol. XXXIV, no. 1, January 1994, pp. 37-40 참조.

對중국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미국내 대기업들의 중국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축성있는 대중국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sup>82)</sup>

이러한 맥락에서 1993년 5월 27일 미국은 政治犯 석방, 收監者의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對美輸出 금지, 世界人權宣言의 준수 등 중국의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1년간 연장하였다.<sup>83)</sup> 이는 비록 조건을 부가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미국이 양국간 상호협력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적 특혜를 연장해 준 것이다.<sup>84)</sup> 1994년에 들어서도 양국은 최혜국대우 연장과 관련하여 년초

82)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1992년 190억 달러, 1993년 2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미국의 對중국 수출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맥도널드, 더글러스, 보잉, AT&T 등 중국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내 대기업들은 클린턴행정부에 중국의 최혜국대우를 연장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Barbara Rudolf, "Status Seeking," *Time*, May 31, 1993, pp. 14~16.

83) 미국이 제시한 최혜국대우 연장의 조건은 2개항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 5개항의 개선요구 조건, 4개항의 주의사항이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Susumu Awano, "Breathing Space: Clinton delays on conditions to China's MFN renewa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0, 1993, p. 13 참조.

84) 중국은 미국의 조건부 최혜국대우 연장 조치와 관련된 외교부성명에서 ① 중·미간의 3개 公報 및 무역관련 협정에 위배된다. ② 미국이 무역문제를 政治化한 것으로 엄연한 內政干渉이다. ③ 최혜국대우는 중·미 양국의 무역관련 협정에 근거한 것이며 양국간 무역의 기초이다. ④ 人權問題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國際準則에 기초하여 平等한 對話, 「求同存異」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抗議 美方將貿易問題政治化, 嚴重干渉中國內政," 「人民日報」, 1993年 5月 29日.

부터 신경전을 벌여 왔으며, 3월 11~14일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美 국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한 기간중 양국간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인권 문제, 티베트문제, 무역불균형 등의 문제에서 중국이 획기적인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나, 중국은 시종일관 「內政干涉」, 「主權侵害」를 내세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sup>85)</sup> 결국 클린턴행정부는 1994년 5월 26일 중국의 인권문제, 무역불균형문제와 최혜국대우의 연계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중·미간의 대립이 일단락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자신들이 중국에 제시했던 조건들이 개선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對中關係의 정치·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일종의 양보정책이다.<sup>86)</sup>

이처럼 1989년 6. 4 천안문사건 이후 냉각되었던 중·미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개선 추세는 양국간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

85) 1994년 3월 중·미 외무장관회담의 구체적인 논의사항과 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錢其琛答中外記者問」, 「人民日報」, 1994年 3月 17日; Lincoln Kaye, "No Stop to Uncle Sam: Beijing gives a frosty reception to Christoph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24, 1994, pp. 18~19; "China 1, America 0," *The Economist*, March 19, 1994, pp. 33~34; Marguerite Johnson, "Good Cop, Bad Cop: A crackdown on dissidents creates a human rights uproar on the eve of Christopher's visit," *Time*, March 14, 1994 참조.

86) 미국의 최혜국대우, 무역문제 연계정책 철회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의 정책전환은 중·미 경제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양국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人民日報」, 1994年 5月 28日.

니고 각자의 利害關係에 대한 現實的 判斷에서 비롯된 것이다.<sup>87)</sup> 따라서 對內外 情勢 變化 및 事案의 性格에 따라 또 다른 대립이 야기될 가능성은 상존하며, 그 중에서도 대만문제는 중·미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로 남아 있다.<sup>88)</sup> 특히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 주력하되, 다른 한편으로 대만과의 비정치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대만의 현상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對中政策, 對臺灣政策은 변화 가능성을 안고 있다.<sup>89)</sup> 최근 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미국의 「북미문제조정협약의

87) 중·미관계의 현실적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학자 陳啓懋는 중·미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浪漫的인 蜜月關係는 영원히 사라졌으며, 상호 이해관계에 기초한 합리적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Qimao Chen,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vol. XXXIII, no. 3 (March 1993), pp. 248~251 참조.

88)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의 대립은 양안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근본적인 타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다만 미국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을 최대한 회피하고 일단 潛在的인 懸案으로 묻어 두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의 궁극적인 철폐를 규정한 1982년의 「8. 17 公報」를 위반하여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를 결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가 미·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 혹은 주요 서방국가들의 對대만 무기판매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선에서 대미 비난의 강도를 조절하였다.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布什政府的決定嚴重損壞中美關係," 「人民日報」, 1992年 9月 4日; "惡化中美關係的嚴重步驟," 「人民日報」, 1992年 9月 5日 참조.

89) 중·대만관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고려에 대해서는 Robert G. Sutter, "Taiwan—Mainland China Relation: Implications For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6, 1992, pp. 19~21; Roger W. Sullivan, "Discarding the China Card," *Foreign Policy*, no. 86, Spring 1992,

회)(대만사무소)를 「대만대표부」로 명칭을 전환하는 등 대만의 政治的 地位를 격상시키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중·대만 관계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sup>90)</sup>

#### 나. 홍콩반환문제의 합리적 해결

양안관계에 있어서 홍콩은 특수한 政治·經濟的 지위를 갖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홍콩의 존재는 양안의 정치적 대립, 대만의 삼통 거부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간차원의 양안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다.<sup>91)</sup> 따라서 1997년 홍콩의 반환과 그에 따른 홍콩의 정치적 지위 변화는 향후 양안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홍콩의 반환이 대만문제 해결의 先例가 된다는 인식하에 홍콩문제 처리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와 관련하여 홍콩의 정치·경제적 변화 추이 및 중국의 정책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과 영국은 1984년 12월 19일 당시 趙紫陽 총리와 대처 수상간에 홍콩 반환 시일을 1997년 7월 1일로 명시한 「中·英

---

pp. 3~23; Martin L. Lasater, *U. S. Interests in the New Taiwan*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3) pp. 223~36 참조.

90) *New York Times*, July 10, 1994.

91) 즉 홍콩은 양안주민들의 상호방문을 위한 중간 경유지, 양안의 교역중개지, 양안의 사회·문화교류지, 양안의 정치·경제상황 변화와 관련된 정보 수집지로서의 활동공간을 제공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중·대만의 관계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쌍방의 직접적인 마찰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했다.

共同聲明」을 공식 채택한 이래 홍콩반환 협상을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하여 왔으나, 1992년 10월 패튼(Chris Patten) 홍콩총독이 홍콩의 政治改革案을 제시하면서 쌍방의 대립이 고조되었다.<sup>92)</sup> 중국은 패튼 총독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식민통치자가 統治地域의 民主化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矛盾이라는 비난과 함께 1992년 10월 이후 영국과의 홍콩반환 협상을 거부하였다.<sup>93)</sup> 이처럼 홍콩반환에 관한 기존의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영국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홍콩의회 의원의 선거방식, 임기 등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중국이 1997년 이후 홍콩 의회(Legco), 행정부(Exco)를 中央統制한다는 전제하에 홍콩의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함으로써 一國兩制를 시범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반면, 영국은 1997년 7월

92) 패튼 홍콩총독이 제시한 정치개혁안의 골자는 홍콩 議會(Legco)의 選舉方式 및 의원의 任期와 관련된 것으로서 ① 直選議員의 확대, ② 職能代表 범위의 擴大, ③ 選舉人團의 直選 등을 주장함으로써 중국의 심한 반발을 야기했다. 또한 패튼 총독은 의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1995년에 선출되는 의원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도 「홍콩특별행정구」 초대 의원으로서 1999년까지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며 홍콩반환과 관련된 모든 조치는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홍콩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New medicine for Hong Kong,” *The Economist*, February 20, 1993, pp. 27~28.

93) 중국은 홍콩당국이 영국의 지지하에 세삼스럽게 정치개혁안을 제기하는 것은 ① 「중·영공동성명」, 「홍콩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및 기존 협의에 違背되고, ② 민주문제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홍콩의 政權交替에 인위적인 장애를 부가함으로써 홍콩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저해하려는 것이며, ③ 홍콩문제와 관련하여 결코 原則上的 妥協이나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人民日報」, 1993年 1月 2日; 「人民日報」, 1993年 1月 9日; 「人民日報」, 1993年 4月 2日.

이후에도 홍콩의회, 행정부를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기관으로 존속시켜려고 하는 데 있다.

한편, 중국과 영국은 홍콩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이로 인한 대립을 지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 문제와 관련된 협상재개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우선 중국은 홍콩반환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쌍방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홍콩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즉 중국은 홍콩문제가 중·영간의 고유한 論議事項에서 벗어나 제3국이 介入하게 될 가능성을 경계했다.<sup>94)</sup> 또한 영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대립이 장기화 될 경우 홍콩의 정치·경제적 安定基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과 중국이 홍콩 내 親中國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통제를 받는 정치·경제 조직을 확대하고 이를 홍콩정부의 對抗勢力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95)</sup>

94) 특히 중국은 패튼 총독이 자신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미국, 일본, 캐나다, EC 등의 지지를 촉구하고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중국의 이러한 우려는 “홍콩문제의 國際化는 중·영간의 협상에 어려움을 加重시킬 것이며 중국은 홍콩이 國際政治의 中心으로 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강조한 국무원 港澳辦公室主任 魯平의 지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14, 1993.

95)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 홍콩내 親中國 政治·經濟組織을 강화하여 왔으며, 특히 영국과의 반환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홍콩반환준비위원회 예비공작위원회」(주임: 錢其琛, 부주임: 魯平)를 설립하는 등 다방면에서 홍콩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張虎, “中共在香港的組織工作,”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5期(1993年5月), pp. 92~103; Jonathan Karp, “The New Insiders,” *Far Eastern*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과 영국은 1993년 4월 22일 중국의 姜恩柱 외교부 부부장과 駐中 英國大使 맥라렌(Robin McLaren)간의 北京會談을 시발로 1993년 11월 27일까지 17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17차의 협상과정에서도 양국간의 근본적인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급기야 중국은 영국이 「三符合原則」, 즉 중·영공동성명, 기본법, 기존의 합의·양해 사항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해결을 모색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협상이 불필요하다는 결론하에 영국과의 협상을 거부했다.<sup>96)</sup> 특히 양국간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국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패튼 총독이 1994년 2월 24일 기존의 중·영회담 내용을 공개하고 독자적인 선거법안을 홍콩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면서 양국의 대립이 더욱 고조되었다.<sup>97)</sup>

이처럼 중국과 영국은 1997년 7월 1일 홍콩반환이라는 大

---

*Economic Review*, May 27, 1993, pp. 62~66; "It's Already 1997 in Hong Kong," *The Economist*, December 18, 1993, pp. 26~28; Louise do Rosario, "Incoming Fire: Colony braces for China's response to reform plan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ember 16, 1993, pp. 19~20 참조.

96) John P. Burns, "Hong Kong in 1993: The Struggle for Authority Intensifies," *Asian Survey*, vol. XXXIV, no. 1, January 1994, pp. 55~58.

97) 중국은 패튼 총독의 일방적인 정치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양국간 회담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무산되었으며, 중국은 1997년 홍콩의 반환 이후 의회를 비롯한 홍콩의 모든 입법기관을 해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 외교부는 패튼이 제시한 정치개혁안의 내용·구상과 영국의 정치적 의도, 협상과정, 중국의 입장 등을 총망라한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中國外交部, 「中英關於香港1994/95年選舉安排會談中幾個主要問題的真相」, 「人民日報」, 1994年 3月 1日 참조.

原則에 이미 合意했을 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 大립을 장기화할 立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雙方의 政治·經濟的 意圖와 맞물려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만약 香港문제로 인한 中·英간의 大립이 지속될 경우 비단 香港의 政治·經濟적 혼란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第 VI 章 結論 및 示唆點

1990년대 이후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급격히 확대된 양안교류·협력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 관계발전의 부재상황속에서도 비정치·민간차원의 양안교류·협력을 부단히 확대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적인 양안관계 발전이 가능했던 주요 요인은 대만이 政治·非政治, 政府·民間分野를 엄격하게 분리한 대륙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중국이 대만의 정책을 탄력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兩岸關係의 변화추이를 감안할 때, 이러한 형태의 양안관계 발전은 지속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양안교류·협력은 이미 정치적인 제약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고, 만약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의 교류·협력마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은 공히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비록 양안의 政治的 關係改善과 관련된 근본적인 타결점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양안의 정치적 관계를 진일보시켜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은 중국과 대만으로 하여금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 더 나아가 통일문제에 적극성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은 교류·협력의 확대라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쌍방의 정치적 관계개선, 통일문제에 대한 共感帶를 형성해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정치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양안의 통일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인식차이는 통일정책상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一國兩制 통일방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의 중국」, 「두제도의 공존」, 「대만의 자치권 보장」 등이다. 우선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중국은 오직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의 중앙정부는 北京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양안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불변의 鐵則으로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등소평체제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대만정책을 전환하고 각종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 또한 중국은 두제도의 공존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가 장기간 공존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서로가 상대방을 파멸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두제도의 공존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통일 이후 대만에 特別行政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기타 다른 지역과는 다른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반면에 대만은 중국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의 국가내에서 두제도가 단순히 공존하는 차원과 다른 一國兩府, 혹은 一國兩區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즉 대만은 대륙의 사회주의와 대만의 자본주의가 主從, 中央·地方의 관계로서 불평등하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통치권, 통치지역을 갖는 대등한 정치실체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의 이러한 주장은 곧 북경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쉽사리 지위가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취약점을 갖는 特別行政區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가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통일을 통해 하나의 중국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중국 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존이나 아니면 독립적인 정치실체로서의 대등한 地域 혹은 대등한 政府의 共存이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이 양안의 통일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쌍방의 정치적 관계설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中國」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兩制」와 「兩區」, 「兩府」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안의 통일논의는 본궤도에 오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쌍방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된 대립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양안의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확대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양안의 교류·협력은 비록 민간차원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대립일변도의 양안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 양안의三通, 그 중에서도 양안교류·협력의 직접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선박·항공기의 양안간 직항로 개설(通航)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류·협력 확대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양안의 평화정착문제에 있어서도 모종의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안의 평화정착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兩岸關係를 급속하게 경색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이 양안의 통일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에서 언급한 대내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대외적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중국은 양안의 통일문제와 남북한문제, 동서독문제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양안의 통일문제는 순수한 중국의 內政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양안의 통일문제에 외세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은 하나,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

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안의 統一問題를 순수한 중국의 내정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서방국들이 중·대만 모두와 다각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양안의 통일문제에는 대외적인 요인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양안의 統一過程에서는 중·대만 쌍방간의 노력못지 않게 중·미관계의 안정적 유지, 홍콩반환문제의 합리적 해결 등 대외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성을 갖는다.

그 밖에 양안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중국과 대만을 불문하고 양안의 統一政策은 각자의 대내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과 대만의 대내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양안의 통일정책은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더욱이 중국과 대만은 모두가 정치·경제적으로 과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兩岸의 교류·협력, 통일문제에 돌출변수가 개재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sup>98)</sup>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는 중국지도부의 세대교체, 특히 鄧小平 死後 지도체제의 안정 유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적인 운용, 중앙·지방 및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98) 중·대만관계의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George T. Crane, "China and Taiwan: not yet Greater China," *International Affairs*, vol. 69, no. 4(October 1993), pp. 722~723 참조.

것이며, 이러한 과제들의 처리결과는 비단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대만 역시 民進黨을 중심으로 한 재야세력의 급 성장과 국민당의 정치적 입지 약화, 국민당의 「臺灣化」에 따른 국민당내 主流·非主流의 대립·분열, 양안관계 및 통일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意見의 對立<sup>99)</sup> 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대륙정책, 통일정책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중·대만의 통일문제는 중국과 대만의 정치·경제적 안정 유지,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 및 평화정착에 대한 입장의

99) 양안관계, 통일정책에 대한 대만내의 다양한 觀點은 각자의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 세대간·출신지역(臺灣出身과 大陸出身)간의 인식차이 등에서 비롯되며, 대체로 ① 급진적인 통일지향 세력, ② 급진적인 대만독립지향 세력, ③ 온건한 통일지향 세력, ④ 온건한 독립지향 세력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급진적인 통일지향 세력과 급진적인 대만독립지향 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며 온건한 統一指向 세력과 온건한 獨立指向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온건한 통일지향 세력의 주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두개의 政治的 實體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體制競爭과 양안주민의 選擇에 의해 統一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온건한 대만독립지향 세력은 일단 대만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통해 두개의 정치적 실체를 확립하고 대내외 상황의 변화를 기다려 대만의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相異하지만 우선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당분간 양안관계의 安定·現狀을 유지한다는 데는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대만내의 多樣한 觀點에 대해서는 楊力宇, “海峽兩岸關係座談會,” 「爭鳴」, 1992年 11月號, p. 86; 殷惠民, “外省人的臺灣,” 「九十年代」, 1992年 11月號, p. 79; Julian Baum, “Mainlanders adrift: Premier’s resignation weakens KMT’s China factio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11, 1993, p. 17; “逾五成國人肯定政府去年表現,” 「中國時報」, 1994年 1月 2日 참조.

절충, 대외적인 통일기반 조성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중국적 특색을 지닌 양안의 통일방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대만의 통일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남북한 통일정책관련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현안의 완전한 해결에 집착하여 모든 교류·협력을 단절시키기 보다는 정치·비정치, 정부·민간분야의 분리를 통해 우선 비정치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쌍방의 정치적 관계발전, 통일기반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양안교류·협력은 1987년 11월 이후 친척방문(探親) 형식을 통한 인적 교류를 계기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교류·협력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쌍방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남북한도 정치적 현안의 先決을 지나치게 고집하기 보다는 정치·비정치분야의 분리를 통해 우선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남북한관계 개선, 통일기반 조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정책은 汎國民的 合意를 바탕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중국과 대만의 경우 양안관련 정책결정은 최고지도부가 철저히 독점하여 왔다. 따라서 일반주민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

나지 못했으며, 설혹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경우 큰 변화가 없었으나 대만에서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즉 대만은 정치민주화, 양안교류·협력의 확대와 함께 「大陸熱」이라고 불릴만큼 중국대륙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양안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

한편 양안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대만주민들의 관심 증대는 양안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능과 世代, 출신지역간(本省人과 外省人), 정당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수반하였다. 특히 民進黨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급성장, 국민당의 정치적 입지 약화, 국민당내의 대립 심화 등 대만의 정국변화와 정치적 불안정은 양안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 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대만의 경우 양안관계, 統一問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정책상의 혼선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대만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 역시 남북한관계,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汎國民的 合意로 결집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정책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대만이 새롭게 제시한 통일정책의 중요한 특징

은 과거에 비해 정치·이념적인 측면을 완화시키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안의 통일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統一白書」에서 양안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통일실현 이전에 相互尊重, 互補互利의 원칙에 따라 쌍방의 경제합작 및 三通을 실현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에 비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현단계에서 통일을 위한 최종 협상에 이르는 과정을 3段階로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의 주요 정책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이 양안의 통일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점진적·단계적 통일정책을 추진하게 된 주요 원인은 중국의 경우 무력에 의한 단기간내의 통일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혹 가능하더라도 중국과 대만의 정치·경제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절대적인 힘의 열세에 처해 있는 대만으로서는 당연히 統一政策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각단계에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이 추구하고 있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은 정치적 안정 및 범국민적 합의 도출, 경제역량 강화, 사회정의 실현 등 대내적 통일기반과 남북한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 등 대외적 통일기반 조성을 필요로 하는 한국으로서도 유념하여야 할 부분이다.

넷째,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상대방

정부 혹은 권력주체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일반주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정책을 전환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대만주민들에 대해 자신들의 새로운 對대만정책, 통일정책방향을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1979년 1월 1일 全人大 상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은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며, 결과적으로 1980년대 이후 양안관계 변화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대만 역시 중국대륙의 일반주민을 겨냥한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륙주민들의 對臺灣觀을 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인 대립속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쌍방이 權力主體와 一般住民을 區分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국민당정부와 대만주민을 구분하고, 대만은 중국공산당정권과 대륙주민을 구분함으로써, 비록 상대방 정권의 正統性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인적 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등 일반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중국과 대만의 이러한 정책은 남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통일정책의 적용대상을 북한 정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북한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政策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일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개선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민간차원의 상호교류·협력을 차단시킨 것은 아니다. 중국과 대만은 양안의 통일과 관련된 原則에 있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쌍방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 즉 중국과 대만은 양안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원칙상의 단호함」과 「정책추진상의 유연함」을 병행하여 적용했다. 이러한 정책은 남북한 統一政策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남북한 통일정책에 관한 원칙과 기본방향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되, 구체적인 정책추진과정에서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내적인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 불식, 간섭 배제 등 대외적인 통일기반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單行本

- 鄧小平. 「鄧小平文選」(一九三八~一九六五). 北京: 人民出版社, 1989.
- . 「鄧小平文選」(一九七五~一九八二). 北京: 人民出版社, 1983.
- .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 蔡政文·林嘉城. 「臺海兩岸政治關係」. 臺北: 國家政策研究資料中心, 1989.
- 臺灣行政院 大陸委員會. 「大陸工作手冊」. 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1.
- 國立編譯館(編). 「國家統一綱領與大陸政策」. 臺北: 國立編譯館, 1993.
- 黃昆輝. 「國統綱領與兩岸關係」. 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3.
- 俞雲波·吳雲鄉·趙壽龍. 「中國民主黨派史略述」.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9.
-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新聞局編. 「兩岸關係與和平統一」. 北京: 華藝出版社, 1992.
- 馬英九. 「兩岸關係的回顧與前瞻」. 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2.

行政院 大陸委員會。「漁事糾紛問題背景說明」。臺北：行政院大陸委員會，1993。

「中國年鑑」。北京：新華出版社，1986。

Jiang, Arnold Xiangz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Martin L. Lasater, *U. S Interests in the New Taiwan*. 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3.

## 2. 論文

鄧小平。「目前的形勢和任務。」「鄧小平文選」,(1975~1982)。

——。「共同努力，實現祖國統一。」「鄧小平文選」，第三卷。

——。「中國是信守若言的。」「鄧小平文選」，第三卷。

——。「會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基礎委員會委員時的講話。」

「人民日報」。1987. 4. 17.

——。「在中央顧問委員會第三次全體會議上的講話。」「鄧小平文選」，第三卷。

——。「目前的形勢和任務。」「鄧小平文選」,(1975~1982)。

——。「我們對香港問題的基本立場。」「鄧小平文選」，第三卷。

——。「一個國家，兩種制度。」「鄧小平文選」第三卷。

——。「保持香港的繁榮和穩定。」「鄧小平文選」，第三卷。

——。「中國大陸和臺灣和平統一的構想。」「人民日報」。1983.

7. 30.

楊尙昆。「臺灣自古就是中國領土，決不坐視任何分裂行徑。」「人

- 民日報」。1991. 10. 10.
- 張 虎. “中共在香港的組織工作.”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5期. 1993年 5月.
- 李登輝. “開創中華民族新時代.” 「大陸工作手冊」, 第一卷.
- 郝柏村. “在1992年大陸工作會議上的行政院長致詞.” 「八十一年大陸工作會議實錄」. 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3.
- 宦國蒼. “北京調整對臺政策.” 「九十年代」. 1986年 3月號.
- 楊力宇. “鄧小平對和平統一的最新構想.” 「七十年代」. 1983年 8月號.
- 楊力宇. “海峽兩岸關係座談會.” 「爭鳴」. 1992年 11月號.
- 陽親華·王明鑒. “毛澤東與對臺工作.” 「人民日報」. 1994. 2. 27.
- 黃昆輝. “國家統一綱領的要旨與內涵.” 「中國大陸研究」, 第34卷 12期. 1991年 12月.
- . “國家統一綱領的要旨與內涵.” 「中國大陸研究」, 第34卷 第12期. 1991年 12月.
- . “中共急於三通, 研擬兩岸直航方案.” 「中央日報」. 1993. 5. 8.
- 李 鵬. “第八屆全人大第二次會議政府工作報告.” 「人民日報」. 1994. 3. 24.
- 余兆吉. “海峽兩岸將展開高層談判.” 「廣角鏡月刊」. 1994年 2月號.
- 鄭中樞. “論臺海兩岸的關係.” 「中國大陸研究」, 第37卷 第1期. 1994年 1月.

- 施若彬. “臺灣重返聯合國的實際行動.” 「爭鳴」. 1993年 6月號.
- 李 怡. “專訪邱進益談汪辜會談.” 「九十年代」. 1993年 6月號.
- 宋國誠. “一九九三年中共對臺政策與兩岸關係的評告.” 「中國大陸研究」. 第37卷 第2期. 1994年 2月.
- 王銘義. “臺商投保法, 對兩岸互動的影響不容忽視.” 「中國時報」. 1994. 3. 7.
- . “兩岸事務性談判應致力突破疆局邁向雙贏.” 「中國時報」. 1994. 1. 3.
- . “陸委會對兩岸會談戰略目標是什麼?” 「中國時報」. 1994. 1. 8.
- 汪道涵. “兩岸的敵對關係幾可稱為已不存在.” 「中央日報」. 1993. 5. 30.
- . “兩岸敵對關係幾可稱為「已不存在」.” 「中央日報(臺灣)」. 1993. 5. 30.
- . “李登輝總統의 CNN 기자회견.” 「中央日報(臺灣)」. 1993. 3. 26.
- 岳 賽. “加入聯合國的奇想: 臺灣外交活動向觀察.” 「開放雜誌」. 1993年 5月號.
- 陳德昇. “中共對臺工作組織與人事分析,” 「中國大陸研究」. 第37卷 第5期. 1994年 5月.
- 殷惠民. “外省人的臺獨.” 「九十年代」. 1992年 11月號.
- Awanohara, Susumu. “Breathing Space: Clinton delays on conditions to China’s MFN renewal.” *Far East-*

- ern Economic Review* (June 10, 1993).
- Bachman, David. "China in 1993: Dissolution, Frenzy, and/or Breakthrough?" *Asian Survey*, vol. XXXIV, no. 1 (January 1994).
- Baum, Julian. "Mainlanders adrift: Premier's resignation weakens KMT's China factio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11, 1993).
- \_\_\_\_\_. "Seatless in Seattle: Compromise on Apec summit leaves Taipei unsatisfied."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7, 1993).
- \_\_\_\_\_. "Virtual Reality: Moves to rejoin UN, recognize Mongoli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 Burns, John P. "Hong Kong in 1993: The Struggle for Authority Intensifies." *Asian Survey*, vol. XXXIV, no. 1 (January 1994).
- Chen, Qimao.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vol. XXXIII, no. 3 (March 1993).
- Chiou, C. L. "Dilemmas in China's Reunification Policy toward Taiwan." *Asian Survey*, vol. XXIV, no. 4 (April, 1986).
- Committee, NPC Standing. "Message to Compatriots in

- Taiwan." *Beijing Review*, no. 1 (January 5, 1979).
- Crane, George T. "China and Taiwan: not yet 'Greater China.'" *International Affairs*, vol. 69, no. 4 (October 1993).
- Johnson, Marguerite. "Good Cop, Bad Cop: A crackdown on dissidents creates a human rights uproar on the eve of Christopher's visit." *Time* (March 14, 1994).
- Karp, Jonathan. "It's Already 1997 in Hong Kong." *The Economist* (December 18, 1993).
- \_\_\_\_\_. "The New Insider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y 27, 1993).
- Kaye, Lincoln. "China 1, America 0." *The Economist* (March 19, 1994).
- \_\_\_\_\_. "No Stop to Uncle Sam: Beijing gives a frosty reception to Christoph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24, 1994).
- \_\_\_\_\_. "Raging Inflation: Lhasa price protests escalate into anti-Chinese rio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 McDonald, Hamish. "The Tibetan Connection: Taipei finds an ally in the Dalai Lam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0, 1993).

- Rosario, Louise do. "Incoming Fire: Colony braces for China's response to reform plan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ember 16, 1993).
- Rudolf, Barbara. "Status Seeking." *Time* (May 31, 1993).
- Sullivan, Roger W. "Discarding the China Card." *Foreign Policy*, No. 86 (Spring 1992).
- Sutter, Robert G. "Taiwan-Mainland China Relation: Implications For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6, 1992).
- Zhengyan, Wei. "China's Diplomacy in 1993." *Beijing Review* (January 17~24, 1994).
- "New medicine for Hong Kong." *The Economist*, February 20, 1993.

### 3. 中國과 臺灣의 公式文件

- 中國全人大 常務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臺灣同胞投資保護法」. 「中國時報」, 1994. 3. 6.
- 國務院 臺灣事務辦公室·國務院 新聞辦公室. 「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人民日報」, 1993. 9. 1.
- 江澤民. 「在毛澤東同志誕辰一百年紀念大會上的講話」. 「人民日報」, 1993. 12. 27.
- .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拔奪取有中國特色社會主

義事業的勝利。”(14全大會 政治工作報告)「人民日報」.

1992. 10. 12.

中國外交部. 「中英關於香港1994 / 95年選舉安排會談中幾個主要問題的真相」. 「人民日報」. 1994. 3. 1.

臺灣 國家統一委員會. 「國家統一綱領」, (1991年 3月 公布).

臺灣行政院 大陸委員會. 「臺灣兩岸關係說明書」. 「中國時報」, 1994年 7月 6日.

#### 4. 其他

「人民日報」.

「光明日報」.

「中央日報」(臺灣).

「中國時報」(臺灣).

「聯合報」(臺灣).

「文匯報」(香港).

「大公報」(香港).

「九十年代」

「爭鳴」

「廣角鏡」

「明報」

「經濟導報」

*China News Analysis.*

*Issues & Studies.*

*The Economis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China Daily.*

*New York Times.*

*South China Morning Pos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東北亞秩序와 南北韓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關係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  
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  
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  
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 事例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北韓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  
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  
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 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6.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關係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9)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ECONOMIC PROBLEMS OF NA-  
TIONAL UNIFICATION(1993)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

---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研究報告書 94-04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4년 9월 일

發行日 1994년 9월 일

---

---